

FTA의 득과 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朴淳讚 · 金眞梧 · 金興鍾 · 朴映坤 · 金均泰
權奇洙 · 權 栗 · 朴馥永 · 裴嬉娟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의 추구를 뒷받침할 政策研究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7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1992년 1월 地域研究를 주요 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현재 30~40명의 박사급 연구진을 포함하여 70여 명의 연구원이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여건, 동북아경제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쳐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國際巨視金融室, 貿易投資政策室(DDA연구팀, FTA연구팀, APEC연구팀), 세계지역연구센터(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東北亞경제협력센터,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北京事務所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를 두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유관부처에 제공되며, 장·단기 研究報告書, 월간『KIEP세계경제』, 반년간『對外經濟研究』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는 본 연구원 KIEP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ep.go.kr>)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院長 安 忠 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02) 3460-1178, 1179 / FAX : (02) 3460-1144

URL : <http://www.kiep.go.kr>

FTA의 득과 실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정책자료 04-01

FTA의 득과 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朴淳讚 · 金眞梧 · 金興鍾 · 朴映坤 · 金均泰
權奇洙 · 權 栗 · 朴馥永 · 裴嬉娟

국문요약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NAFTA에 이어 미 대륙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형성하려는 미주자유무역 지대(FTAA)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FTA는 무역 및 투자의 촉진,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경제성장의 촉진 등의 다양한 효과를 지닌다. NAFTA, EU 등 FTA 사례에서 무역이 증가하고 투자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NAFTA 역내 교역비중은 1993년 각각 27.8% 및 74.6%였으나, 2002년 32.1% 및 78.0%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MERCOSUR의 경우 경제통합 이전인 1990년대 초 FDI 유입은 2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5년 관세동맹으로 발전함에 따라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1999년에는 529억 달러에 달하였다.

FTA로 인해 경제성장이 촉진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FTA 체결 이후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긍정적인 효과만을 유발하지는 않으며 경제적 손실을 함께 수반하는데, 그 예로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생산감소 및 구조조정비용, 계층간 소득불균형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FTA는 개별 국가 전체에는 이익이 되지만, 무역장벽으로 보호받던 비효율적인 산업의 생산은 감소하게 되어 이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동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비용은 보호장벽이 높을수록 더 클 것이다. 또한 산업의 효율성이 증진되면서 비숙련 단순노동의 수요가 감소하여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사이의

소득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국가는 무역자유화로 인한 기술수준 향상을 비롯한 경제적 이익을 흡수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는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이익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

FTA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시장접근의 제약으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강조되어야 할 점은 구조조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력이 약하고 보호장벽이 높은 산업에 대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개방정책을 추구하여 연착륙(soft landing)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FTA의 이익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의 수준 향상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 례

국문요약	5
------------	---

1. FTA 현황 및 경제적 이해득실의 이론적 배경 / 박순찬

가. FTA 현황	13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14
다. 요약 및 시사점	19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김진오

가. NA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21
나. NAFTA 전후의 성과 분석	27
다. 요약 및 시사점	40

3. 유럽연합(EU) / 김흥중, 박영곤, 김군태

가. 유럽연합의 형성	44
나. EU의 동유럽 확대	50
다. EU·터키 관세동맹	62
라. EU·남아프리카공화국 FTA	68

4. MERCOSUR / 권기수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74
나. FTA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80

다. 요약 및 시사점	85
-------------------	----

5.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 권 울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89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94
다. 요약 및 시사점	104

6.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 박복영, 배희연

가. 요르단·미국 FTA	107
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111

7. 요약 및 결론 / 박순찬

가. NAFTA	116
나. EU	118
다. MERCOSUR	120
라. ASEAN	121
마.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123
바. 경제적 손실	124
사. 시사점	125

표 차례

〈표 1〉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의 건수	13
〈표 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1960~80년대)	24
〈표 3〉 NAFTA 회원국 경제성장률 추이	28
〈표 4〉 NAFTA 발효 직전까지의 멕시코 주요 경제지표	29
〈표 5〉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의 주요 경제지표	29
〈표 6〉 NAFTA 역내 무역비중	31
〈표 7〉 미국의 수출입 규모 및 비중 추이	32
〈표 8〉 멕시코의 수출입 추이	33
〈표 9〉 캐나다의 수출입 및 비중 동향	35
〈표 10〉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투자	36
〈표 11〉 주요 국가별·경제권역별 對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 분포	38
〈표 12〉 유럽국가의 주요 연도별 상대적 소득 추이	46
〈표 13〉 신규가입 8개국의 경제수렴	51
〈표 14〉 중구 5개국의 경제수렴 전망(경제수렴 소요기간)	52
〈표 15〉 중·동구 주요국의 수출의존도(2001년)	53
〈표 16〉 중·동구 국가들의 EU와의 산업내 교역 추이 (Grubel-Lloyd 지수)	54
〈표 17〉 신규가입 8개국의 제조업 주요 투자업종	56
〈표 18〉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구성비(1999년)	56
〈표 19〉 신규가입 8개국의 제조업의 발전(1995~2002년)	59
〈표 20〉 신규가입 8개국의 단위노동비용(2001년)	60

〈표 21〉 터키의 GDP 성장률 추이	63
〈표 22〉 EU의 對터키 무역 추이	64
〈표 23〉 EU의 對터키 해외투자	65
〈표 24〉 EU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69
〈표 25〉 EU의 對남아프리카공화국 교역 추이	70
〈표 26〉 EU와 남아프리카공화국 FDI 추이	71
〈표 27〉 MERCOSUR의 경제규모(2002년 기준)	75
〈표 28〉 MERCOSUR 역내 관세인하 일정	77
〈표 29〉 MERCOSUR내 주요 품목의 평균 대외공동관세	78
〈표 30〉 MERCOSUR 회원국들의 평균 대외관세	78
〈표 31〉 MERCOSUR 4개국의 경제성장 추이	81
〈표 32〉 MERCOSUR의 수출 추이	82
〈표 33〉 MERCOSUR의 역내 수출비중 추이	83
〈표 34〉 MERCOSUR FDI 유입 추이	84
〈표 35〉 ASEAN의 경제협력 프로그램(AFTA 플러스) 추진현황	92
〈표 36〉 AFTA의 거시 경제적 효과	95
〈표 37〉 AFTA의 역내 무역수지에 대한 효과	98
〈표 38〉 ASEAN+3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	100
〈표 39〉 ASEAN 회원국의 CEPT 관세인하품목(2003년)	102
〈표 40〉 ASEAN 회원국의 역내관세율 인하추이(1998~2003년)	103
〈표 41〉 중동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비교	108
〈표 42〉 요르단의 무역 추이	109
〈표 43〉 요르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액	110

그림 차례

〈그림 1〉 연도별 소득 추이	46
〈그림 2〉 MERCOSUR의 세계경제 위상	76
〈그림 3〉 MERCOSUR 회원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81
〈그림 4〉 AFTA의 국별 거시경제효과	97
〈그림 5〉 AFTA의 국별 수출입효과	97
〈그림 6〉 요르단의 對美 상품 수출입 추이	109
〈그림 7〉 GCC 역내 수출비중 추이	113
〈그림 8〉 GCC 국가 GDP 대비 FDI Stock의 비중	113

1. FTA 현황 및 경제적 이해득실의 이론적 배경

가. FTA 현황

- 2003년 5월 현재 GATT/WTO 통보된 FTA 중 총 184개가 발효된 상태임.
 - 지역주의는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지역주의에 반대해왔던 미국이 1980년대 후반에 정책을 선회함으로써 확산계기가 마련됨.
 - 지역주의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은 것은 1990년대이며,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됨.

〈표 1〉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의 건수

	1948~94	1995~2001	WTO에 보고된 지역 무역협정	유효한 지역무역협정	진행 중인 지역무역협정
협정건수	124	96	255	184	70

자료: WTO CRTA(지역무역협정위원회)

- 현재 전 세계적으로 184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유효하며, 70개의 새로운 협정이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WTO 가맹국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FTA 체결하였으며, WTO 146개 회원국 중 미참여 국가는(미발효 포함) 몽골 등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 유럽 및 미주지역의 경제통합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유럽연합(EU)은 동유럽 국가의 EU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남미지역으로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2005년까지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창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동안 지역경제통합을 외면했던 동북아 지역의 국가도 FTA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AFTA가 체결되었고, 일본도 싱가포르와 FTA를 하면서 ASEAN 국가와의 FTA를 제안하고 있음. 또한 중국도 ASEAN 국가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음.

나. FTA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1) 경제성장

- FTA는 자본(physical capital), 인적자본(human capital) 및 지식자본(knowledge capital)의 축적을 촉진하거나 이 자본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FTA는 경제성장효과를 가짐.
- FTA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제거되면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됨. 이를 자원배분의 효율성향상효과(resource allocation efficiency)라 칭함.
-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곧 국내총생산 및 소득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렇게 증가된 소득의 일부는 저축되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하고 자본스톡이 증가함. 투자와 자본스톡의 증가는 다시 국내총생산과 소득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를 중기 경제성장효과(medium run growth effects)라 칭함.
- 또한 내생적 경제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은 인적자본 또는 지식자본이 축적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FTA를 통해 기술전파(technology spillover)가 가속화되어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지식자본이 축적되면 장기적인 경제성장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아울러 FTA를 통해 지식자본 또는 인적자본을 집약적으로 사용하

는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면, 이 산업은 인적자본과 지식자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인적자본과 지식자본이 축적되어 장기적인 경쟁성장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2) 무역

- FTA로 인해 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양국의 쌍방무역(bilateral trade)은 증가함.
 - Viner(1954)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즉 FTA의 체결로 양국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지금까지 제3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제품을 FTA 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됨. 여기서 제3국이 효율적인 생산자임에도 불구하고 FTA 파트너 국가로 수입이 전환되는 것을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라 칭하고, 제3국이 비효율적인 생산자이나 FTA가 체결되기 이전에 FTA 파트너 국가의 높은 무역장벽으로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였으나 FTA의 체결로 FTA 파트너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라 칭함.
 -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창출효과, 또는 무역전환효과로 구분되지만 FTA가 양국간의 무역을 증진시키는 것은 명확함.
- 양국간 무역의 증가는 곧 양국이 각각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에 특화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됨. 또한 FTA 이전에 국내독점산업이 존재할 경우, FTA로 인해 FTA 파트너 국가에 있는 산업과 경쟁이 심화됨. 이러한 경쟁의 심화는 FTA 이전에 독점으로 인한 왜곡(distortion)을 해소하여 국가의 후생(welfare)이 증가함.

3) 투자

□ 투자는 국내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FDI)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FTA로 경쟁력을 지닌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FTA가 FDI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있기 때문에 FTA와 FDI의 관계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움.

- FDI는 수평적 FDI(horizontal FDI)와 수직적 FDI(vertical FDI)로 구분될 수 있고, FTA의 영향으로 FDI는 FTA 역내국가(insider)는 물론 역외국가(outsider)로부터도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를 별도로 분석해야 함.

□ 역내국가로부터의 FDI

- 수평적 FDI는 현지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수출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무역과 대체관계에 있음. 즉 외국기업이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갖고 있는 수단은 수출과 수평적 FDI 두 가지가 있음. 관세, 비관세, 운송비용 등을 포함하는 거래비용이 높으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tariff jumping) 수평적 FDI는 증가함. 따라서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되면 거래비용이 낮아져서 수출이 FDI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기 때문에 역내국가로부터 수평적 FDI가 증가할 가능성은 줄어듦.

- 수직적 FDI는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생산단계별로 생산기지를 다른 국가에 두는 것이며, 수직적 FDI를 통해 생산된 제품은 본국으로 재수입되기 때문에 무역과 보완관계에 있음. FTA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되어 거래비용이 낮아지면 역내국가로부터의 수직적 FDI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역외국가로부터의 FDI

- FTA 체결로 양국은 관세가 없는 공동시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는 결국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함. 역외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FTA 이전에는 각 개별 국가의 시장에 수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FTA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관세를 지불하면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역내국가에 생산기지를 마련하여 확대된 공동 시장에 무관세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해짐. 따라서 역외국가로부터의 수평적 FDI는 증가될 수 있음.

- 역외국가로부터의 수직적 FDI는 FTA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 예를 들어 역외국가의 어떤 기업이 한국에 부품공장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다시 자국으로 재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FTA와는 큰 연관성이 없음. 단 역외국가에서 부품을 비롯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관세를 절감(tariff jumping)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음.

□ 투자협정조항

- FTA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반덤핑, 지적재산권 등의 경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분야를 협상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지금까지 체결된 FTA의 경우, 투자협정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협정조항이 포함될 경우 양국간의 직접투자는 증가할 수 있음.
- 투자협정으로 투자보호와 투자자유화가 이루어지면, 보다 안정적인 투자입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고 투자제한부문이 없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함.

4) 기타

- 신경제지리이론(new economic geography)은 경제통합 또는 무역자유화가 경제활동의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경제통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척되면 각 국가에 존재하는 기업이 그 국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와 시장접근에 따른 이

익을 누리기 위해 어떤 소수의 지역 또는 국가로 집중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 Krugman and Venables(1995)는 산업산업 집중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로 산업간의 수직적 연계에서 찾고 있음. 이 이론에 따르면 규모의 경제와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수요가 큰 시장에서 생산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작은 시장으로 수출하는 것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재 산업은 최종재 산업이 집중된 곳에 그리고 최종재 산업은 중간재 산업이 집중된 곳으로 집중됨.
- 산업의 집중현상이 발생하면 국가는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누어지며 이 국가들간 소득격차는 확대됨.

□ FTA로 경제통합이 진척되면 개별 국가 전체에는 이익이 되지만, 무역장벽으로 보호받던 비효율적인 산업의 생산은 감소하게 되므로, 산업간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음.

- 경쟁력이 약하고 비효율적인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동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구조조정비용은 보호장벽이 높을수록 더 클 것임.
- 또한 산업의 효율성이 증진되면서 비숙련 단순노동의 수요가 감소하여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사이의 소득격차가 확대될 수 있음.
- 여러 실증연구는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은 국가는 무역자유화로 인한 기술수준 향상을 비롯한 경제적 이익을 흡수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는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이익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또한 숙련노동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무역자유화로 소득배분이 개선되나,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소득배분이 악화된다고 보고하고 있음.

다. 요약 및 시사점

- 다자협상을 위한 WTO 체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FTA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2003년 5월 현재 체결된 FTA는 184개에 달하고 있음.
 - FTA는 배타적 이익 확보, 미국과 EU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높은 관심, 다자체제의 관리능력 한계 등을 고려해 볼 때, FTA는 뉴라운드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확대·심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또한 과거 UR에서 경험했듯이, 다자협상의 진전이 부진할 경우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주요 교역국들의 관심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우리나라가 FTA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러한 손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임.
- FTA는 양국의 무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함.
 - FTA의 체결로 양국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FTA 파트너로부터의 수입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3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제품을 FTA 파트너 국가로부터 수입하게 되어 양국의 무역은 증가됨.
 - 또한 FTA 체결로 무역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쟁력이 높은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됨.
 - 아울러 FTA 체결로 국내외 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FTA 이전에 국내기업의 독점력으로 인한 왜곡(distortion)을 해소하여 국가의 후생(welfare)이 증가함.
- FTA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투자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함.
 - FTA가 자본, 인적자본 및 지식자본의 축적을 촉진하거나 이 자본들에 대한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FTA는 경제성장효

과를 가짐.

- 무역의 증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되면 국내총생산 및 소득의 증가하게 되며, 이렇게 증가된 소득의 일부는 저축되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하고 자본스톡이 증가함. 이렇게 증가된 투자와 자본스톡으로 국내총생산과 소득은 더욱 크게 증가함.
- 양국간의 무역이 촉진되어 무역과정에서 기술전파(technology spillover)가 가속화되어 지식자본이 축적되거나 관세 및 비관세의 철폐로 지식자본 또는 인적자본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면, 이 산업은 인적자본과 지식자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FTA는 장기적인 경제성장효과를 지님.

□ FTA는 역내 및 역외국가로부터의 직접투자를 촉진함.

- FTA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되어 거래비용이 낮아지면 역내국가로부터의 낮은 생산비용 또는 높은 숙련노동을 이용하려는 수직적 FDI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FTA는 곧 양국의 시장통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역외국의 입장에서는 역내에 생산기지를 마련하여 확대된 공동시장에 무관세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역외국가로부터의 수평적 FDI는 증가될 수 있음.
- FTA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투자협정조항도 포함되는데, 이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투자입지로서의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양국간의 직접투자는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 FTA의 체결로 무역장벽으로 보호받던 비효율적인 산업의 생산은 감소하게 되고, 이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완전히 재취업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실업이 발생하는 구조조정비용이 수반됨.

- 또한 비숙련 단순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사이의 소득격차가 확대될 수 있음.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 NA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1) 미국의 입장

- 미국은 1989년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Canada-US Free Trade Agreement: CUSFTA)이 발효되고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자 멕시코를 포함하는 북미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지연에 따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 1986년 9월부터 지속된 UR의 다자간 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MTN)이 1990년대 들어 개발도상국들의 반발 등으로 그 진행이 느려지자 UR협상과는 별도의 지역무역협상이 추진되었음.
 - UR에서 서비스협상은 관련 산업기반이 미흡한 개발도상국들의 반발로, 농산물 협상도 농업보조금 삭감 등을 둘러싸고 난항을 거듭하였음.
 - 그 외에 원산지 규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등의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협상이 부진하였음.
 - 이처럼 UR협상 타결이 난관에 부딪치자 미국은 입지 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세계화를 이끌 다자간 무역협상(MTN)과 NAFTA와 같은 지역주의(Regionalism) 노선을 병행하게 되었던 것임.
- 멕시코의 개혁과 그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

- 미국은 1985년부터 시도된 멕시코의 개혁정책으로 멕시코 경제가 보다 더 예측 가능한 환경으로 변하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멕시코를 지원하고, 멕시코와의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미국은 NAFTA가 정치적 충격이나 국제금융위기에 매우 취약하고 민주개혁 역시 초기단계에 있는 멕시코의 개혁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성장과 정치적 다원주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

- 1980년대 GATT체제 약화와 보호무역주의 심화, 유럽의 단일시장(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발족과 통합 심화, 일본 경제력 급부상으로 국제경제에 있어 미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음.
- 국제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EU와 같은 거대 경제권을 견제하고 일본 경제권의 확장에 맞설 수 있는 지속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북미를 기반으로 한 경제권 형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

□ 미국경제 회복의 모색

- 미국경제는 1, 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초에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과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저조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로 산업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음.
- 또한 1970년대 이후 국방비 및 사회보장비 지출 증대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국내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로 1980년대에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등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음.
- 이에 미국은 1985년 7월 「균형예산법(Gramm- Rudman-Hollings Act of 1985)」 제정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이후 쌍둥이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등장하게 되었음.

- 이에 미국은 북미지역 규모의 경제달성과 생산의 전문화를 통해 경제회복은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와 만성적 무역적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NAFTA를 적극 추진하였음.

□ CUSFTA의 성공

- 미국의 NAFTA에 대한 입장과 그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는 주로 멕시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바, 이러한 입장은 CUSFTA를 통해 캐나다와의 제반무역 이슈들을 논의하고 해결해 왔으며 앞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경험적 인식에 기초하였음.
- 또한 CUSFTA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자유무역지역을 미·캐나다에서 북미지역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표 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1960~80년대)

(단위: 연평균 %)

	1961~69	1970~73	1974~75	1976~79	1980~82	1983~89
실질GDP증가율	4.6	3.6	-0.5	4.6	0.0	3.9
소비자물가상승률	2.4	4.9	10.1	7.8	10.0	3.6
경상수지 ¹⁾	0.5	0.1	0.6	-0.3	-0.0	-2.6
연방재정수지	-0.7	-1.5	-1.8	-2.7	-3.0	-4.2

주: 1) 경상 GDP 대비.

자료: 한국은행(1997), 『주요국의 경제안정화 및 구조개혁 경험』; 『미국 대통령경제보고서』(2000).

2) 캐나다의 입장

□ 북미시장 재편에의 편승

- 캐나다에서는 NAFTA협상 과정에서 NAFTA 참여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음.
- 반대를 주장하는 측은 더 이상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가장 핵심적인 반대이유로 제기한바, 미국과의 무역 이슈에 대해서는 기존의

CUSFTA로 해결이 가능하고 멕시코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교역비중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교역증대효과가 미미하리라 전망했기 때문이었음.

- 그러나 논쟁의 결론은 참여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그 동기는 미국 중심으로 무역협정이 이루어지는 데 대한 두려움이었음.
 - 즉 미국이 CUSFTA와는 별도로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북미지역 교역이 미국 중심의 ‘허브(Hub)&스포크(Spoke)’ 체제로 재편되어 교역증대에 따른 후생이 미국으로 집중될 것을 우려하였음.

□ 미국시장으로의 진출 제고

- CUSFTA 이후 미국시장 진출이 증가하였으나 원산지 규정의 구체화 및 관세협력 강화 등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함으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미국시장 진출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 NAFTA협상을 통해 그와 같은 구체적인 관심사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자동차부문에 있어서 현지조달에 대한 규정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고 캐나다 문화산업에 대해 외국기업의 경쟁을 배제하는 데 성공하였음.

□ 멕시코시장으로의 진출

- 비록 캐나다·멕시코간 교역비중은 미미하나 1990년대 이후 멕시코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멕시코시장에 대한 캐나다産 상품과 서비스의 진입에 관심이 제고되었음.
 - CUSFTA에 의해 당시 캐나다·미국 양국간 교역의 70% 정도가 이미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어 NAFTA로 인해 별다른 이득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캐나다는 NAFTA협상 초기 다소 소극적이었음.
 - 그러나 멕시코시장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캐나다의 멕시코시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 이러한 측면 이외에도 캐나다는 멕시코의 산업고도화에 필요한 자본재의 수출기회 확대를 통해 자국기업들의 멕시코 시장점유율 제고에 관심을 두었음.
- 또한 캐나다는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을 활용하여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중남미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3) 멕시코의 입장

-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멕시코가 NA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국내의 정치·경제적 요인과 대외 환경적 변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
- 정치·경제적 불안정과 경제발전전략의 수정
 - 멕시코는 1980년대에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했는데, 특히 1982년에 발생한 외채위기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시발점이 되고 경제발전전략 수정 등 경제의 구조조정을 강요하였음.
 - 국제금리 급상승, 외자유입 중단, 수출 주종 품목인 석유가격 폭락에 따른 외화획득 차단 등은 멕시코의 대외거래를 파산상태로 이끌었고 거시 경제적으로는 초인플레이, 경제성장 정체 및 후퇴, 高실업률, 국민소득 하락 등을 야기하였음.
 - 경제 불안정 및 경기침체의 장기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해 온 멕시코의 정치에도 위기감을 고조시킨바,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PRI)의 유례 없는 저조한 득표율이 정치위기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었음.
 - 그러한 정치·경제적 변화는 멕시코로 하여금 새로운 代案을 모색하도록 강요했는데, 그 결과는 경제발전전략의 수정이었음.
 - 멕시코는 1940년대부터 유지해 온 내부지향적인 수입대체산업

화정 책을 대외지향적인 개방정책으로 전환한바, 개방정책의 중심적인 수단은 무역개방, 수출품 다변화, 그리고 민영화였음.

□ 대외적 배경

- 멕시코가 NAFTA를 추진한 대외적 배경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 지역주의, 그리고 세계화 현상으로 요약됨.
- 미국은 1960년대까지 세계경제를 통제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그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서방을 정치·사상적으로 통합해 왔음.
- 멕시코 또한 그러한 경제체제 속에서 미국과 밀접한 통상 및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가져다 준 국내적 긴장을 보호주의적인 관세와 복지정책과 같은 국가의 개입을 통해 관리하였음.
 - 그러나 멕시코는 1970년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국과의 통상마찰 증가, 미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경제 취약성, 그리고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을 경험하였음.
- 이에 캐나다가 미국과의 FTA를 통해 변화에 대응한 것처럼 멕시코 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였음.

□ 결론적으로 멕시코의 NAFTA 추진 배경은 단순히 시장 확대로 향유할 수 있는 상호이익에 대한 인식보다는 국제정치경제 구조변화에 대한 역할과 관련한 강제와 권력분배에 영향을 받았음.

- 즉 멕시코는 국제정치경제 구조변화(특히 CUSFTA 출범에 따른 캐나다의 시장대체)에 강제되어 미국시장에의 접근을 확보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비공식적인 양해보다는 협상을 통한 규칙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NAFTA를 추진하였음.

나. NAFTA 전후의 성과 분석

1) 경제성장

- NAFTA 회원국별 경제에 미치는 수많은 요인 중에서 NAFTA의 출범이라는 영향만을 따로 떼어내서 확인하는 작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NAFTA 출범 이후에 나타난 NAFTA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임.
 - 또한 NAFTA가 출범한 이후 대외환경 및 각 회원국의 경제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도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장애 요인임.
 - NAFTA 외부의 요인들 중 주목되는 점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신경제(New Economy)’라 불리는 미국경제의 호황, ▼페소貨의 위기로 1995년부터 시작된 멕시코경제의 침체, ▼우루과이라운드, WTO 등을 통해 1995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MFN 관세인하 등이 대표적임.
- 1990년대 미국경제, 장기 호황
 - NAFTA 효과, 특히 수출증대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1990년대 미국경제는 정보기술(IT)의 발전에 기반을 두고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면서 사상 최장기의 팽창을 지속하였음.
 - GDP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1년에 세계경제 침체, IT산업 버블 붕괴, 테러사태 영향 등으로 하락하기까지 미국경제는 1992~2000년 사이에 연평균 3.6% 성장했음.
- 캐나다, 미국경제 사이클에 따른 성장 기록
 - CUSFTA 이후 1989~92년에 미국경제 침체에 동반되어 경기침체를 경험했던 캐나다는 NAFTA 이후 미국경제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반적인 호황을 누렸음.

〈표 3〉 NAFTA 회원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미 국	1.8	-0.5	3.1	2.7	4.0	2.7	3.6	4.4	4.3	4.1	3.8	0.3	2.4
캐나다	0.2	-2.1	0.9	2.3	4.8	2.8	1.6	4.2	4.1	5.5	5.3	1.9	3.3
멕시코	5.2	4.5	3.5	1.9	4.5	-6.2	5.1	6.8	4.9	3.7	6.6	-0.3	0.6

자료: Global Insight, Quarterly Forecast Analysis: Country Tables, United States; Canada; Mexico, Dec. 2003.

- 1993~2000년 사이에 캐나다경제는 연평균 3.8% 성장하였음.

□ 멕시코, 안정 속에 경제성장 달성

- 멕시코경제는 NAFTA 효과, 역동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1994년의 폐소貨 위기 등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영향을 받았지만,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수출을 견인한 NAFTA 효과가 특히 두드러짐.

- 멕시코는 미국과 IMF를 비롯한 국제적인 지원과 NAFTA 경제권의 호황을 바탕으로 폐소貨 위기를 단기에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1995년 -6.2%에서 1996년 5.2%와 1997년 7.0%로 단숨에 제고시켰음.

○ 그리고 이후 연속적인 개발도상국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멕시코경제는 미국경제의 호황에 기인한 수출증가와 내수회복,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경제체질을 바탕으로 물가 및 환율 등의 안정 속에 성장을 기록하였음.

- NAFTA 찬성론자들은 1995년 중반 이후의 빠른 회복세 시현과 1997년 초의 위기 이전의 GDP 수준 회복을 NAFTA에 따른 것으로 분석함.

○ 즉 NAFTA로 인해 미국시장에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진입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1976년이나 1982년에 치른 위기들과 비교하여

〈표 4〉 NAFTA 발효 직전까지의 멕시코 주요 경제지표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수 출(10억 달러)	30.7	35.2	40.7	42.7	46.2	51.9
수 입(10억 달러)	28.1	34.8	41.6	50.0	62.1	65.4
경상수지(10억 달러)	-2.4	-5.8	-7.5	-14.6	-24.4	-23.4
물가상승률(%)	114.1	20.0	26.7	22.7	15.5	9.8
실업률(연평균, %)	4.9	2.0	7.4	7.7	8.2	9.3
외채(10억 달러)	101.8	95.3	104.3	116.6	117.6	131.5
환율(페소/달러) ¹⁾	2550.3	2453.2	2807.3	3017.9	3094.4	3.1

주: 1) 1993년부터 환율은 新페소로 표기(1新페소=1천 페소), 1996년 1월 1일부터 공식통화가 페소로 개정됨.

자료: Global Insight, *Mexico-Summary of Detailed Forecast*, Annual Numbers, 19-Dec-2003.

〈표 5〉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의 주요 경제지표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 출(10억 달러)	60.9	79.5	96.0	110.4	117.5	136.4	166.5	158.4	160.7	165.3
수 입(10억 달러)	79.3	72.5	89.5	109.8	125.4	142.0	174.5	168.4	168.7	171.0
경상수지(10억 달러)	-29.7	-1.6	-2.5	-7.7	-16.1	-14.0	-17.7	-17.7	-15.8	-11.0
소비자물가상승률(%)	7.0	35.0	34.4	20.6	15.9	16.6	9.5	6.4	5.0	4.0
실업률(연평균, %)	9.7	11.2	10.5	9.9	10.0	10.1	8.3	10.7	12.5	15.1
외채(10억 달러)	142.1	169.6	163.6	152.8	162.1	164.4	158.4	155.4	166.4	173.0
환율 (중앙은행 고시, 평균)	3.4	6.4	7.6	7.9	9.2	9.6	9.5	9.4	9.7	10.8

주: Global Insight, *Mexico-Summary of Detailed Forecast*, Annual Numbers, 19-Dec-2003.

기적적이라 일컬을 정도의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것임.

2) 무역

- NAFTA 회원국간 수출입 변화가 독립된 하나의 변수로서 NAFTA 출범에 기인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USITC 보고서¹⁾는 미국과 멕시코간 교역증가의 경우는 NAFTA의 출범과 높은 통계적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 역내무역의 확대

- CUSFTA가 존재하는 북미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하려는 NAFTA의 목표로 인하여 주안점은 멕시코의 무역장벽 제거에 두어졌음.
- 그 결과 멕시코와의 교역이 증가된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간 교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 회원국들간 역내무역도 급증하였음.
- 미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미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1980년 22.0%이던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무역비중이 2001년 32.4%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2002년에는 중국의 시장진출 확대 영향으로 32.1%로 줄어들었음.
- 그러나 이러한 비중의 증가는 멕시코와의 교역 확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캐나다와의 교역비중은 1993년 이후 큰 변화가 없는 실정임.

□ 미국 · 멕시코 무역 확대

- 폐소貨 위기에 동반된 멕시코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對멕시코 수출은 중국 변수가 등장하여 줄어든 2001년 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기록했음.
- 1993년 416억 달러이던 미국의 對멕시코 수출이 2000년 1,088억 달러로 162% 증가하고, 수출비중은 1980년 6.9%, 1990년 7.2%에서 2000년 14.1%로 급격히 상승하였음.
- 이러한 급신장으로 미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던 순위가 세 번째이던 멕시코는 일본(1999년 574억 달러)을 제치고 미국의 두 번째 수출 상대국으로 등장하였음.
- 한편 멕시코로부터의 수입 역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바, 비중은 1980년 5.0%에서 2002년 11.3%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1) USITC(1997), "Impact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on the U.S. Economy and Industries," USITC Report No. 3045.

〈표 6〉 NAFTA 역내 무역비중

(단위: %)

	미 국			캐나다			멕시코		
	캐나다	멕시코	역내	미국	멕시코	역내	미국	캐나다	역내
1980	16.2	5.8	22.0	63.9	0.5	64.5	65.5	1.1	66.7
1985	20.3	5.7	26.0	72.2	0.8	73.0	69.7	1.5	71.1
1990	19.4	6.5	25.9	69.4	0.8	70.2	73.7	0.8	74.5
1991	19.2	7.0	26.2	69.2	1.0	70.2	76.6	1.9	78.5
1992	19.2	7.7	26.8	71.0	1.1	72.0	75.5	1.9	77.5
1993	20.1	7.7	27.8	73.4	1.2	74.6	76.5	2.3	78.8
1994	20.5	8.4	28.9	74.4	1.2	75.6	77.7	2.2	79.9
1995	20.3	8.1	28.3	74.1	1.3	75.4	79.3	2.2	81.5
1996	20.3	9.1	29.4	75.5	1.4	76.9	79.9	2.1	82.0
1997	20.3	10.0	30.3	75.7	1.4	77.1	80.2	1.9	82.2
1998	20.4	10.8	31.2	77.6	1.5	79.1	80.9	1.6	82.5
1999	20.8	11.3	32.1	77.9	1.6	79.5	81.1	1.9	83.0
2000	20.1	12.1	32.2	76.7	1.8	78.5	80.7	2.2	82.9
2001	20.1	12.3	32.4	76.7	1.9	78.6	77.8	2.2	80.0
2002	19.8	12.3	32.1	76.0	2.0	78.0	76.0	2.2	78.6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2003*.

- 對멕시코 수입도 일본을 제치고 2위로 부상했지만, 2003년에 중국의 부상으로 3위로 밀려났음.
- 미국·캐나다 무역, 비중 측면에서는 변화 미미
 - CUSFTA 발효를 앞두고 급증하던 미국과 캐나다와의 교역은 NAFTA 이후 급격한 증가보다는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음.
 - 1980년에 양국간 교역수준은 절대적 수치에 있어 멕시코의 두 배 이상이며 교역비중으로는 미국 총수출입의 16% 내외를 기록하였음.
 - 2002년에 양국간 교역은 3,750억 달러로 1993년(2,138억 달러)에 비해 75.4% 증가하였으나 수출입비중을 살펴보면 미진하다고 볼 수 있음.

〈표 7〉 미국의 수출입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10억 달러)

연 도	수 출			수 입		
	총수출	對멕시코	對캐나다	총수입	對멕시코	對캐나다
1980	220.8	15.1 (6.9%)	35.4 (16.0%)	257.0	12.8 (5.0%)	42.0 (16.3%)
1985	213.1	13.6 (6.4%)	47.3 (22.2%)	361.6	19.4 (5.4%)	69.4 (19.2%)
1990	393.1	28.4 (7.2%)	83.0 (21.1%)	517.0	30.8 (6.0%)	93.8 (18.1%)
1991	421.8	33.3 (7.9%)	85.1 (20.2%)	509.3	31.9 (6.3%)	93.7 (18.4%)
1992	447.3	40.6 (9.1%)	90.2 (20.2%)	552.6	35.9 (6.5%)	101.3 (18.3%)
1993	465.4	41.6 (8.9%)	100.2 (21.5%)	600.0	40.7 (6.8%)	113.6 (18.9%)
1994	512.4	50.8 (9.9%)	114.3 (22.3%)	689.3	50.4 (7.3%)	132.0 (19.1%)
1995	583.5	46.3 (7.9%)	126.0 (21.6%)	771.0	62.8 (8.1%)	148.3 (19.2%)
1996	622.9	56.8 (9.1%)	132.6 (21.3%)	817.8	74.1 (9.1%)	159.7 (19.5%)
1997	687.6	71.4 (10.4%)	150.1 (21.8%)	898.7	87.2 (9.7%)	171.4 (19.1%)
1998	680.0	79.0 (11.6%)	154.2 (22.7%)	944.6	96.1 (10.2%)	178.0 (18.8%)
1999	691.0	86.4 (12.5%)	163.0 (23.6%)	1,048.0	109.5 (10.4%)	198.8 (19.0%)
2000	772.0	108.8 (14.1%)	174.6 (22.6%)	1,238.0	135.1 (10.9%)	229.2 (18.5%)
2001	731.0	101.5 (13.9%)	163.7 (22.4%)	1,180.0	132.8 (11.3%)	220.1 (18.7%)
2002	693.0	97.5 (14.1%)	161.0 (23.2%)	1,202.0	136.1 (11.3%)	214.0 (17.8%)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2003*.

〈표 8〉 멕시코의 수출입 추이

(단위: 10억 달러)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총수출	51.9	60.9	79.5	96.0	110.4	117.5	136.4	166.5	158.4	160.0
증가율(%)	12.3	17.3	30.5	20.7	15.0	6.4	16.1	22.1	-4.9	4.4
對美	42.9	51.6	66.3	80.7	94.5	103.3	120.4	147.7	140.3	143.0
對캐나다	1.6	1.5	2.0	2.2	2.2	1.5	2.4	3.4	3.1	2.8
총수입	65.4	79.3	72.5	89.5	109.8	125.4	142.0	174.5	168.4	168.3
증가율(%)	5.3	21.2	-8.5	23.4	22.7	13.9	13.6	22.9	-3.5	-0.1
對美	45.3	54.8	53.8	67.6	82.2	93.3	105.3	127.5	113.8	106.6
對캐나다	1.2	1.6	1.4	1.7	2.0	2.3	2.9	4.0	4.2	4.5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2003*.

- 1980년에 16% 정도이던 캐나다의 對美 수출입비중(미국 총수출입 기준)이 CUSFTA가 시작되기 전인 1985년에 각각 22.2%, 19.2%로 급증한 이후 同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
 - 2002년에는 수출과 수입비중이 23.2%와 17.8%를 기록하여 미국·캐나다 교역은 절대적 수치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의 총수출입에서의 캐나다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1980년 캐나다 총수출의 60%이던 對美 수출비중은 1993년에 80%를 넘어서 2002년에 87.7%를 기록하고, 수입비중은 1998년에 68.3%까지 상승했다가 2002년에 62.7%를 기록했음.
 - 즉 최근 對美 수출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수입비중은 하락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NAFTA 출범 이후 캐나다의 무역패턴이 이전보다 미국에 더욱 집중되고 있고,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캐나다·멕시코 무역 확대
-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1980년에 65~67% 내외이던 역내 무역비중이

한때 80%를 넘어서기도 하였지만 2002년 78~79%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역내무역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의 교역과 비교할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간 교역은 미미한 수준임.
- NAFTA 출범 이전 캐나다의 입장에서 멕시코와의 교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1980년 對멕시코 수출비중이 0.6%, 수입비중은 0.5%에 불과했음.
 - 멕시코의 NAFTA 가입으로 캐나다의 對멕시코 수출(캐나다 기준)은 1990년에서 2002년까지 절대적 수치에서는 200% 증가하였으나, 수출비중은 여전히 0.6%에 불과함.
 - 반면 1990년 1.2%를 기록하던 멕시코로부터의 수입비중은 2002년 3.6%로 급증하였음.

3) 투자

□ 미국, 국내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 해소

- NAFTA 출범 이전에 미국기업들의 對멕시코 직접투자 확대 및 국내투자 감소 우려가 대두되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음.
 - 1995년 이후 對멕시코 직접투자가 미국 총투자대비 0.5~1.0% 미만인 연간 30억~60억 달러 수준에 그친 가운데, 국내투자 감소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체적인 투자패턴에도 영향이 미미했음.

□ 미국의 對NAFTA 회원국 직접투자

- 미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4년 693억 달러 수준이던 것이 1999년에는 1,746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2년에는 1,09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음.
 - 주요 투자대상국은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이고,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임.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의 對멕시코 직접투자가 NAFTA 출범

〈표 9〉 캐나다의 수출입 및 비중 동향

(단위: 10억 달러)

연 도	수 출			수 입		
	총수출	對멕시코	對미국	총수입	對멕시코	對미국
1980	67.7	0.4 (0.6%)	41.1 (60.6%)	61.0	0.3 (0.5%)	41.2 (67.5%)
1985	90.8	0.3 (0.3%)	68.3 (75.2%)	78.7	1.0 (1.2%)	54.1 (68.7%)
1990	126.4	0.5 (0.4%)	95.4 (75.4%)	119.7	1.5 (1.2%)	75.3 (62.9%)
1991	126.2	0.4 (0.3%)	95.6 (75.8%)	120.5	2.1 (1.8%)	75.0 (62.3%)
1992	133.4	0.6 (0.5%)	103.9 (77.8%)	124.8	2.2 (1.8%)	79.3 (63.5%)
1993	140.7	0.6 (0.4%)	114.4 (81.3%)	134.9	2.7 (2.0%)	87.8 (65.0%)
1994	161.3	0.7 (0.4%)	133.1 (82.5%)	151.5	3.1 (2.1%)	99.6 (65.8%)
1995	190.2	0.8 (0.4%)	152.9 (80.4%)	163.3	3.8 (2.3%)	109.0 (66.7%)
1996	200.1	0.9 (0.4%)	164.8 (82.3%)	170.0	4.3 (2.5%)	114.6 (67.4%)
1997	213.0	0.9 (0.4%)	177.3 (83.2%)	195.5	5.0 (2.5%)	131.9 (67.5%)
1998	211.4	0.9 (0.4%)	182.8 (86.5%)	200.3	5.1 (2.5%)	136.8 (68.3%)
1999	237.3	1.0 (0.4%)	208.0 (87.6%)	214.2	6.3 (2.9%)	143.5 (67.0%)
2000	275.2	1.4 (0.5%)	240.6 (87.4%)	238.8	7.8 (3.3%)	153.7 (64.4%)
2001	261.3	1.5 (0.6%)	229.0 (87.6%)	221.5	7.8 (3.5%)	141.1 (63.7%)
2002	252.4	1.5 (0.6%)	221.3 (87.7%)	222.0	8.1 (3.6%)	139.1 (62.7%)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2003*.

〈표 10〉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투자

(단위: 10억 달러)

	1999	2000	2001	2002
해외직접투자	174.6	165.0	114.0	109.0
영국	47.8	35.8	13.2	18.6
캐나다	18.1	19.0	14.4	17.3
스위스	8.4	10.0	6.6	7.7
네덜란드	8.3	3.0	16.1	18.4
멕시코	5.9	5.3	15.1	3.6
외국인직접투자	283.4	301.0	124.4	23.6
영국	116.6	75.7	14.2	9.4
네덜란드	41.7	39.6	15.2	-3.5
룩셈부르크	6.9	25.2	-13.8	10.9
프랑스	29.8	49.4	14.7	7.1
독일	23.5	14.3	28.0	-2.6
캐나다	26.4	26.0	4.6	-5.5

자료: 미 상무부 (Bureau of Economic Analysis), International Investment Data, 2003. 3.

과 상관없이 미국의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멕시코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3%에서 1994년에 5.3%로 제고되었지만, 폐소화 위기 직후인 1995년에는 3.4%로 떨어진 이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2001년 對멕시코 직접투자가 총해외투자의 13.2%인 151억 달러를 기록한 것은 시티그룹이 멕시코 금융기관을 합병한 결과로 일시적인 투자증가였음.

-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직접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1993년 906억 캐나다 달러이던 미국의 對캐나다 직접투자는 1999년 1,766억 캐나다 달러로 94.9% 증가하고 2000년에는 190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음.

□ NAFTA 회원국의 對美 투자

- 캐나다의 對美 투자는 NAFTA 출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독일에 이은 여섯 번째 투자국의 지위를 구축한 반면, 멕시코는 경제여건상 對美 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임.

○ 캐나다의 對美 직접투자는 1993년 676.8억 캐나다 달러에서 1999년에는 약 두 배 증가한 1,343억 캐나다 달러(264억 달러)를 기록했음. 그러나 2001년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2002년에는 55억 달러 줄어들었음.

□ 對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 급증

- NAFTA 출범 이전에 연 40억 달러, 1989~93년 사이에 연평균 3.7% 증가에 그친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NAFTA협상이 시작된 1991년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발효 첫 해에는 150억 달러(신고 기준) 수준을 돌파했음.
- 1994~2003년 9월까지 멕시코는 총 1,400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개발도상국 가운데에서는 주요 투자유치국이 되었음.
- 1994~2003년 9월 사이에 멕시코가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실행 기준) 가운데 미국이 65.1%를, 유럽연합국가들이 21.2%를, 캐나다는 3.7%를 차지했음.
- 한편 멕시코의 對캐나다 직접투자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멕시코의 경제수준이 외국에 직접투자 할 수준이 못 되는 상황을 반영하였기 때문임.

4) 기타 - 특기사항(멕시코를 중심으로)

□ 생산구조 개편 및 특화

- 멕시코는 NAFTA의 무역증대효과, NAFTA 출범 이전부터 실시된 시장개방 및 구조조정조치들, 그리고 1990년대 초반의 역동적인

FDI 유입으로 인하여 생산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경험했음.

- 특히 상업은행 민영화, 금융부문 규제 완화, 그리고 자본이동에 유리한 금융시장 환경 조성 등은 멕시코 금융시장의 팽창에 기여하고, 외자유입과 연계된 폐소貨의 고평가는 생산부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
- 그러나 탈산업화 경향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생산구조 변화에 동반하여 수출활동과 연계된 제조업부문이 강화되었음.
- 다른 한편으로 내수용 제조업, 중소기업, 농업 등 개방의 결과로 나타난 상대적인 가격구조에 대처하지 못한 부문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현상이 심화되었음.

〈표 11〉 주요 국가별 경제권역별 對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 분포

(단위: 백만 달러, %)

지역/국가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9	누계3)	
총계 ¹⁾	15,048	9,650	9,960	14,191	12,281	13,153	16,405	26,537	14,435	8,094	139,753	
총계 ²⁾	10,643	8,328	7,720	12,157	8,238	13,153	16,405	26,537	13,149	7,043	123,373	100.0
북미	5,705.5	5,651.9	5,702.6	7,691.4	5,546.3	7,680.9	12,551.6	21,304.5	8,381.7	4,645.6	84,862.0	68.8
캐나다	740.7	170.2	516.3	240.1	208.7	622.9	663.9	978.1	240.7	155.0	4,536.6	3.7
미국	4,964.8	5,481.7	5,186.3	7,451.3	5,337.6	7,058.0	11,887.7	20,326.4	8,141.0	4,490.6	80,325.4	65.1
EU	1,934.5	1,840.1	1,144.6	3,173.1	2,053.8	3,703.9	2,681.9	4,032.1	3,636.5	2,094.0	26,294.5	21.2
독일	307.5	548.6	201.4	483.8	137.3	743.9	344.4	-162.9	580.7	263.8	3,448.5	2.8
스페인	144.3	49.7	73.7	328.1	344.5	997.2	1,907.5	741.5	282.2	215.9	5,084.6	4.1
네덜란드	757.6	744.7	493.3	358.8	1,069.9	995.3	2,548.4	2,608.8	1,144.9	351.4	11,073.1	9.0
영국	593.4	218.9	83.3	1,830.0	183.6	-193.4	268.3	94.9	1,143.0	857.6	5,079.6	4.1
안티아스(네)	468.5	70.3	62.8	9.1	5.7	16.1	67.5	36.8	40.0	35.1	811.9	0.7
케이만군도	93.0	28.6	48.8	330.3	108.8	85.3	84.1	99.8	112.5	54.3	1,045.5	0.9
인도	1,218.7	50.5	285.7	28.7	0.0	0.1	27.5	3.1	0.1	0.0	1,614.4	1.3
일본	631.0	155.8	143.9	353.0	100.0	1,238.5	424.8	170.9	128.1	103.2	3,449.2	2.8
파나마	338.2	59.6	18.3	16.4	18.1	-23.8	3.2	53.9	14.4	-6.6	491.7	0.4

주: 1) 신고 기준, 2) 실행 기준, 3) 1994~2003년 9월 기준.

자료: Comisión Nacional de Inversiones Extranjeras, Noviembre de 2003, *Informe Estadístico Trimestral sobre el Comportamiento de la Inversión Extranjera Directa en México, Enero-Septiembre de 2003.*

□ 미국과의 통상마찰 축소

- NAFTA 이전에는 미국과 멕시코간 무역분쟁이 빈번하였으나, NAFTA 발효 이후에는 그 사례가 무역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

□ 수출산업의 고용창출

- NAFTA의 최대 효과 중의 하나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로 평가됨. 특히 마길라도라산업에 진출한 기업이 1993년 2천 개에서 1998년 9월 기준 4,300개로 증가하면서 고용인원도 1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증가했음.
- 특히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영향으로 Aguascalientes, Chihuahua, Jalisco, Queretaro, Guanajuato 등 서북부지역 주들은 거의 完全雇用 상태로 보였음.

□ 후방연관효과(backward linkage effect)의 증대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외국(미국 및 캐나다) 생산업체와 국내 공급업체간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후방연관효과가 가시화되었음.
 - 자동차산업의 경우 NAFTA 시장의 매력과 함께 폐소화 약세로 멕시코가 각광받는 투자지역으로 부각되면서 1997년경 이미 멕시코의 자동차 및 트럭 생산능력은 연간 100만 대를 돌파하였고, 부품 납품에 주력하는 멕시코 제조업체들은 기술인력 훈련과 각 지역의 공급망을 확충하면서 질적 성장세를 보이게 되었음.
- 그러나 NAFTA 발효 이후 연간 18%의 성장세를 지속한 보세가공 무역업(마길라도라산업)의 국내산업과의 연관효과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미하여 상기한 바와 같은 후방연관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NAFTA 등을 통한 개방정책의 부정적인 측면 주장 대두

- 경쟁력 취약산업의 실업 증가 및 실질임금 감소, 빈부격차 심화

- 무역자유화(개방화)와 NAFTA는 멕시코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부족이라는 한계로 말미암아 고용창출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 무역자유화 환경하에서 기업 측면에서는 고용의 창출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획득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으므로 멕시코내에서 고용의 감소가 초래되었음.
- 개방 이후 멕시코의 성장은 이와 같은 효율성의 향상을 통한 것이었으므로 “GDP의 증가와 실업이 반비례한다”는 일반적인 법칙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었음.
- 즉 NAFTA 발효 직전과 직후에 구조조정의 필요성으로 고용악화가 뚜렷이 나타났음.
- 국내 산업기반의 침식
 - 무역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멕시코 국내 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외부충격에 따른 경제의 취약성 심화
 - 미국경제와의 긴밀도(종속)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미국 국내경기 사이클에 멕시코경제가 지나치게 큰 영향을 받게 되었음. 이러한 주장은 2000년 이후 미국경제의 침체에 동반한 멕시코경제의 침체로 설득력을 획득하고 있음.

다.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 NAFTA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과 멕시코와 같은 개발도상국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임.
- NAFTA의 가장 큰 효과는 역내 교역의 확대임.

- NAFTA의 목적은 북미지역에서 각종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회원국 간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며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나가는 것이었음.
 - 이러한 목적은 기존의 CUSFTA가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를 멕시코로 확장할 유인이 발생하였고, 미국으로서는 1990년대 초의 국내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NAFTA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 따라서 NAFTA협상에서는 각 회원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주된 사안이었으며, 미국과 캐나다가 기존의 CUSFTA를 통해 양국 간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초점은 자연스럽게 멕시코로 모아졌음.
 - 멕시코의 관세인하조치가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멕시코와의 교역이 증가하게 되었고 또한 미국과 캐나다간 교역 역시 꾸준히 증가하였음.
- NAFTA의 출범으로 북미지역 교역관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미국 의존도가 심화되었음.
- 이러한 현상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 주변국들에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미국경제의 浮沈이 회원국들에 아무런 여과 없이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어 NAFTA가 만들어낸 문제점으로도 지적되고 있음.
- 투자부문에서 NAFTA의 출범으로 역내 투자가 활성화되리라 전망되었으나 실제로 나타난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음.
- 즉 미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 중 캐나다와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가 유럽과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신경제현상으로 말미암아 미국

- 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었고 정보기술(IT)산업의 발달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투자가 쇄도하였기 때문임.
- 이러한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라 NAFTA 역내 투자비중은 감소하였으며, 이는 NAFTA 출범 효과 전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임.
 - 그러나 캐나다에 대한 역내 투자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멕시코의 對캐나다 투자가 워낙 저조한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미국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멕시코의 경우도 미국의 투자가 역시 다수를 이루고 있는 반면, 캐나다의 對멕시코 투자는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투자현상 역시 역내교역에서 발견된 점과 마찬가지로 NAFTA 역내에서 미국경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회원국의 미국경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증거임.
- NAFTA로 인하여 북미지역은 자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되었고, 각 회원국은 자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산업으로 더욱 특화할 수 있어 지역 전체로 보면 보다 더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케 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 제고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계층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반감이 지속적으로 팽창되고 있음.

2) 시사점

- NAFTA의 출범으로 파생된 미국과 캐나다의 교역패턴 변화는 향후 한국이 체결하고자 하는 각종 FTA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즉 한국과 일본의 무역관계에서 비록 양국이 자본·노동 부존비율 및 경제성장단계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캐나다의 경험에 주의 깊게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양국이 포함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양국간 산업내 무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반도체 등

의 산업에서 양방향교역(Two-Way Trade, 산업내 무역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 급증할 것임.

- 그러나 NAFTA에서도 보았듯이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일본에 대한 한국경제의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 물론 한국의 경우 현재까지 對美 교역과 對中 교역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일본과의 교역 비중이 급증하여 이에 따른 일본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수도 있을 것임.
- 투자부문에 있어 한국으로의 투자 중 상당한 부분이 미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일본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투자패턴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것임.
 - 그러나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절대적인 수치상으로 한국의 對日 투자 및 일본의 對韓 투자 모두 증가할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중국이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다면 저임노동력을 겨냥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확산되어 국내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경우 NAFTA 출범 이전 멕시코로의 기업 진출 확산에 따른 국내투자 감소가 염려되었으나 정보기술산업의 발달 등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었음.
 - 따라서 한국의 경우도 한국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투자유망국가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3. 유럽연합(EU)

가. 유럽연합의 형성

1) 유럽연합 결성의 배경

- 유럽통합은 상대적으로 왜소해진 서유럽의 위상을 회복하고 유럽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산물이었음.
 -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양대 세력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왜소해진 서유럽 국가들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럽(경제)통합을 통한 지역적 이익의 극대화가 절실히 요청되었음.
 - 1870년 이래 불과 70여년 만에 세 번의 큰 전쟁을 벌였던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핵심국가들 사이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및 자원의 공동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 14세기 이후 외적 위협이 증대될 때마다 제기된 통합의 역사적 전통과 기독교적 문명의 공통성이 통합의 배경이 되었음.
- 유럽 통합체의 결성은 전후 유럽지원 계획의 성공적 운영과 유럽인들의 통합에 대한 열망이 정치적 동인으로 작용하여 구체화되었음.
 - 서유럽 부흥을 위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성공적 운영(1947~52년)과 프랑스 외상 슈망의 선언(1950년) 이후 구체화됨.
 - 1952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의 6개 대륙국은 슈망의 계획안에 따라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결성하여 석탄 및 철강의 공동관리체제를 구축하였음.
 - 이어서 1957년에는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안과 로마조약으로 대표되는 유럽경제공동체(EEC)안이 합의됨으로써 유럽공동체

가 실현되었음.

- 1967년 상기 3개 조직이 통합되어 유럽공동체(EC)가 발족하였음.
- 1993년 유럽공동체는 유럽연합(EU)로 확대 개편되었음.

□ EU는 1973년 이래 1981년, 1986년 그리고 1995년까지 네 번에 걸쳐 확대되었음.

- 1차 확대(1973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가입
- 2차 확대(1981년): 그리스 가입
- 3차 확대(1986년): 스페인, 포르투갈 가입
- 4차 확대(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가입

2) 유럽연합 결성의 성과 분석

가) 경제성장

□ EU 확대가 신규 가입국의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함.

- EU 가입이 경제성장과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Brada and Mendez 1988),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특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Vanhoudt 1999).
- EU 국가들의 장기적 경제성장률이 증가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우며, 단기적 통합의 이익은 국가별로 차별화되었음(Deardorff and Stern 2002). 즉 경제규모가 큰 신규 가입국이 먼저 통합의 이익, 즉 경제 성장률의 일시적 증가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을 이루어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통합에 일찍 동참한 소국임.
- 1913년부터 1950년, 1973년 그리고 1992년에 서유럽 중심국에 대한 지중해연안국의 상대적 소득수준은 각각 47%, 39%, 49%, 그리고 48%의 수준을 나타내어 일반적인 소득 수렴을 관찰할 수 없음(Berend 2003).

- EU 가입 이후 한 가지로 정형화할 수 있는 소득 수렴의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님(표 12 참고).
- 가장 성공적인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1973년 EU 가입 이후 상당 기간을 상대소득의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1980년대 후반에 가서야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
 - 반면 그리스의 경우에는 EU 가입협상이 본격화된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가장 높은 상대적 소득을 보이다가 그 이후 소득 수준의 하강을 경험하고 있음.
 -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완만한 소득수준의 상승을 보여 주고 있는데

〈표 12〉 유럽국가의 주요 연도별 상대적 소득 추이

(단위: 독일=10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최초 6개국	벨기에	98	105	103	99	102	99	104
	네덜란드	107	110	102	98	100	99	106
	룩셈부르크	122	122	113	117	138	163	193
	독일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탈리아	91	93	96	95	99	96	95
	프랑스	100	104	102	101	103	96	98
1973년 가입국	영국	98	99 ¹⁾	91	92	94	93	97
	덴마크	130	128 ¹⁾	115	117	112	113	116
1995년 가입국	핀란드	92	103	98	101	104	89 ⁴⁾	104
	스웨덴	120	123	108	109	107	98 ⁴⁾	104
	오스트리아	91	99	99	98	102	100 ⁴⁾	104
상대적 후진국	그리스	67	76	72 ²⁾	67	61	59	64
	아일랜드	59	59 ¹⁾	63	63	73	82	115
	스페인	74	83	73	69 ³⁾	74	78	79
	포르투갈	51	56	57	55 ³⁾	63	62	70
미가입국	스위스	166	152	141	136	134	117	116
	아이슬란드	88	105	114	111	108	97	108
	노르웨이	91	103	106	112	105	114	118

주: 반 괄호는 각각 해당국가의 EU 가입연도의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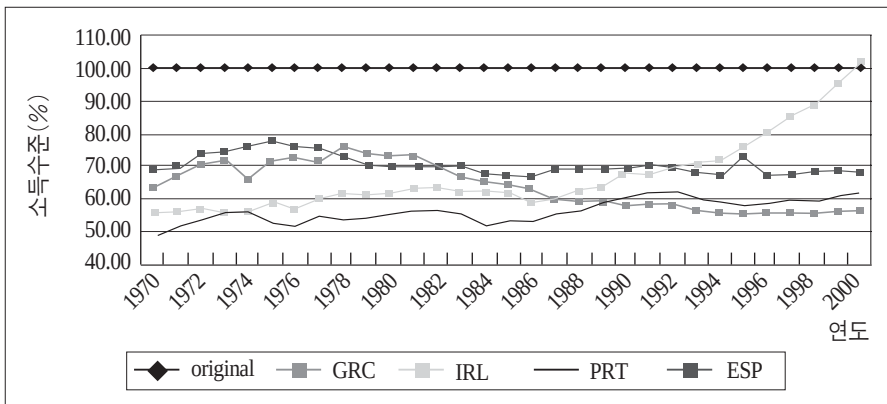
1) 1973년, 2) 1981년, 3) 1986년, 4) 1995년.

자료: Heston, Summers and Aten, 2002, Penn World Table version 6.1에서 저자 계산

포르투갈의 경우가 좀 더 소득수준의 향상이 빠른 것으로 나타남.

- 4차에 걸친 과거의 EU 확대에서 보면, 경제통합이 일어나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다고 해서 소득수준이 수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반드시 수렴하는 것도 아님(그림 1 참고).

〈그림 1〉 연도별 소득 추이



자료: Heston(2002), Summers and Aten, Penn World Table version 6.1에서 저자 계산

-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1973년 EU 가입 이후 약간의 소득 증가를 경험하다가 1980년대 중후반에 와서 오히려 상대소득이 감소하고 있음. 하지만 1990년대 이후의 상대적 소득 수렴은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
 - 그리스의 경우는 EU 가입 이후 오히려 상대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포르투갈에서는 완만한 소득 증가가 관찰됨. 스페인의 경우 완만한 소득 수렴이 나타나나 아직도 1970년대의 상대 소득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음.
- 결국 경제통합의 효과는 국가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나며, 시기적으로 볼 때에도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때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음.

나) 무역

- EU의 결성이 역내 교역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됨.
 - 역내 교역의 활성화가 일어났음(Srinivasan *et al.* 1993).
- 1958년 이후 공동체의 역내 교역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 1958년 역내 교역 비중은 35%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에는 55% 전후로 증가하였으며, 2001년 현재 60%를 상회함.
- 통합의 무역창출효과가 나타난 것은 1958년 로마조약과 1992년 단일시장의 도입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로마조약 이후 관세 및 쿼터의 철폐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 관세 및 쿼터의 철폐는 자동적, 강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1960년대 경제 호황이 이러한 관세 철폐를 용이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음.
 - 대외공동관세 및 쿼터의 설정을 통하여 무역전환효과도 일부 발생하였음.
 - 1986년 공동체는 EC-1992를 통해 1992년까지 단일시장을 완성하기로 하였음. 역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쟁왜곡의 방지를 위해 물리적 장벽, 기술적 장벽, 그리고 재정적 장벽의 철폐를 국가별로 점검하였음. 이를 통해 통관 심사 등 질적 장벽의 수준이 크게 낮아졌음.

다) 투자

- EU 가입이 투자를 증가시킴(Brada and Mendez 1988).
- 투자의 증대는 역내 선진국간 투자의 활성화와 함께 신규가입국에의 투자 증대로 나타났음. 공동체의 자본시장 통합과정이 투자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음.
- 스페인은 이러한 가운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스페인의 정치적 안정, 상대적으로 큰 내수시장, 유럽외 구 스페인 식민국과의 관계, 그리고 지리적 이점이 크게 작용하였음.

-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1980년대 후반 이후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역내 투자보다도 역외국(미국, 일본 등)으로부터의 투자 증가가 더 컸음.

라) 기타 - 특기사항

□ 단일시장의 출범 이후 경제통합체로서의 기능이 확대되었음.

- 단일시장법(SEA)은 상품시장의 통합뿐만 아니라 요소시장의 통합, 자본시장의 통합, 그리고 노동시장의 통합을 목표로 한 EU의 심화에 대한 결정판이었음.
-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까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던 유럽통합의 속도는 단일시장의 도입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

3) 요약 및 시사점

□ 유럽연합의 형성과 발전은 경제통합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무역 및 투자, 역내 단일시장의 완성도에서 EU는 여타 경제공동체의 통합 정도를 능가하고 있음.

□ 이러한 성공적인 경제통합체의 구성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촉발된 강력한 추진력에 기인한 바 크며, 통합의 이익은 그 이후 서서히 실현된 것으로 평가됨.

- 경제성장에서 통합의 이익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제성장 및 소득증대를 가져오는 요인이 매우 많고 복잡다기하기 때

문인 것으로 파악됨.

- 유럽통합의 경험은 성공적인 경제통합체의 운영을 위해서는 정치적, 문화적 유대감 및 경제적 필요성이 내재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나. EU의 동유럽 확대

1) EU 확대의 배경

- 구소련의 몰락,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의 붕괴, 독일의 재통일로 동유럽경제의 자본주의화가 진행되었음.
 -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동유럽의 서유럽화가 진행되면서 EU 확대가 자연스럽게 핵심주제로 부상되었음.
- 동유럽 국가들도 EU 편입을 통해 체제 전환을 조속히 실현하고자 하였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신청이 잇따름.
- EU의 동유럽 확대는 유럽에서의 이념대결의 최종적 종식을 의미함.
 - 50여 년에 걸친 이념대결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상징적 계기가 됨. 이에 따라 EU는 동유럽 국가들의 EU 편입을 강력히 지지하였으며, 독일의 통일 이후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됨.
- 동유럽 체제변환의 경로
 - 첫째, 체제전환국들이 시행한 민영화의 결과 많은 서유럽 기업이 지분참여와 신규투자를 시행하였음. 이를 통해 많은 자본이 중 동구 국가들에 투자되었음.
 - 둘째, 교역관계에서도 양 지역간 교역이 증대되었는데, 이는 중·

동구 시장에 대한 서유럽 제품의 진출과 서유럽 기업들의 투자증대에 따른 산업내 교역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이밖에도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인적 교류, 학문적 교류와 노동 이동에 의한 경제관계의 강화가 진행되었음.

2) EU 확대 성과 분석

가) 경제성장

- 동유럽 경제의 EU 편입은 체제전환이라는 다른 요인이 개입되어 있어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EU 경제로의 편입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됨(표 13 참고).
-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은 체제전환과정에서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음으로써 1990년대 중반까지 EU와의 경제력 차이는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음.
- 1990년에서 1995년 사이 동 8개국의 GDP는 연평균 1%씩 감소하였으며 고용은 무려 2.8%씩 감소하였음. 당시 EU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1.5%이었으므로 GDP 성장률에서 EU와의 격차는 무려 2.5%에 달하였음.
- 1995년 이후 신규가입국은 EU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함.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6%에 달해 EU보다

〈표 13〉 신규가입 8개국의 경제수렴

(단위: %, %pt.)

	1990~95		1995~2002	
	연평균 성장률	EU와의 성장격차*	연평균 성장률	EU와의 성장격차*
GDP	-1.0	-2.5	3.6	1.3
고용	-2.8	-2.4	0.0	-1.2
거시생산성	1.9	0.0	3.6	2.6

주: *percent point

자료: Hanvlik and Urban(2003), p. 28에서 정리

1.3% 포인트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그럼에도 고용은 전혀 늘지 않아 거시 생산성은 EU보다 2.6% 포인트 높은 3.6%를 기록하게 됨.

- 따라서 1990년대 중반에 와서 어느 정도 자본주의 체제가 도입되고 나서야 중·동구 신규가입국들은 EU 경제에 대한 수렴을 시작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며, 경제 성장의 효과도 예상외로 낮은 수준임.

- 1993년 이후 동유럽 신규가입국의 경제성장 수렴도는 연간 1%로 추정됨(김홍중 외 2003). 이는 현재 소득격차의 반을 따라잡는 데 대략 69년이 걸리는 느린 속도임.
- 신규회원국간 성장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음(김홍중 외 2003; Römisch 2003). 즉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의 빠른 성장으로 말미암아 지역간 성장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국가별 분석에서도 확인됨. 또한 과거 공업지역의 쇠락과 도시 중심의 새로운 산업의 성장, 서비스업의 성장, 서유럽과 가까운 지역의 성장이 두드러짐.

□ 향후 경제성장 전망

- 중구 5개국이 매년 3%의 1인당 GDP 증가를 기록할 경우, EU 15의 75% 수준까지는 50년, 100% 수준까지 경제가 수렴하는 데에는 무려 80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WIIW 2003).

〈표 14〉 중구 5개국의 경제수렴 전망(경제수렴 소요기간)

(단위: %, %pt.)

	1인당 GDP 연평균 3% 성장	1인당 GDP 연평균 4% 성장	1인당 GDP 연평균 5% 성장
EU15의 50% 수준까지 경제수렴	50년	27년	19년
EU15의 100% 수준까지 경제수렴	80년	42년	29년

자료: Hanvlik and Urban(2003), p. 28에서 정리

나) 무역

- 중·동구 국가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EU와 유럽 협정을 체결하고 EU 가입을 신청하는 등 EU 지향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이 국가들의 무역관계는 舊동구권에서 서구로 중심이동이 이루어졌음.
 - 현재 EU는 모든 신규가입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신규가입국들의 EU 교역의존도는 50%(리투아니아) 75%(헝가리)에 이르고 있음(표 15 참고).
- 제조업 교역에서 신규가입국의 EU 의존도는 9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임. 제조업에서 기존 EU 회원국과 신규가입국간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 EU 회원국 제품을 제외한 EU 수입시장에서 신규 가입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에 9.5%에서 2001년에는 13.2%로 올랐음. 또 2001년도의 경우 EU의 역외수출품 중 13%는 신규 가입국으로 감.
- 이렇게 강화된 교역관계를 바탕으로 양 지역간 산업내 교역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표 16 참고).
 - 1995년 이후 산업내 교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 15〉 중·동구 주요국의 수출의존도(2001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GDP 대비 총수출(%)
	對EU 수출	對美 수출	
헝가리	76.5	5.0	58.8
폴란드	75.0	2.4	20.5
체코	66.0	3.0	58.8
루마니아	64.0	3.1	28.7
불가리아	57.1	5.6	37.7

자료: 1) WIIW, *WIIW Handbook of Statistics; Countries in Transition 2002*.

2) Deutsche Bank(2002), *EU Enlargement Monitor; Central and Eastern Europe*. (October 15)

경향은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체크, 슬로베니아,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반면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와 EU와의 산업내 교역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산업내 교역은 전기광학제품과 운송설비, 섬유제품에서 특별히 높음.
- 교역관계가 EU 중심으로 진행되는 동안에 중·동구 국가들의 무역패턴도 많은 변화가 진행됨. 특히 시장경제로의 전환 초기에는 가장 숙련도가 낮은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보였던 무역구조가 EU 가입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숙련도가 높은 산업에서 경쟁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변화

□ 중·동구 국가들 가운데 특히 중구 5개국은 무역특화구조의 선진화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가장 빠르게 EU의 무역특화구조에 수렴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아직까지는 무역특화구조의 선진화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발틱 3국도 EU 가입 이후에는 다소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EU 역내에서 상당 기간 동안 생산비

〈표 16〉 중·동구 국가들의 EU와의 산업내 교역 추이(Grubel-Lolyd 지수)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체코 공화국	0.645	0.660	0.709	0.729	0.729	0.741	0.765
에스토니아	0.440	0.485	0.474	0.475	0.475	0.405	0.433
헝가리	0.578	0.601	0.606	0.611	0.606	0.642	0.631
라트비아	0.290	0.265	0.299	0.278	0.271	0.232	0.222
리투아니아	0.273	0.288	0.294	0.307	0.347	0.317	0.298
폴란드	0.455	0.463	0.470	0.486	0.508	0.553	0.568
슬로바키아	0.534	0.574	0.577	0.541	0.553	0.570	0.559
슬로베니아	0.651	0.661	0.670	0.684	0.674	0.673	0.683
불가리아	0.401	0.419	0.413	0.415	0.401	0.391	0.402
루마니아	0.327	0.336	0.341	0.333	0.371	0.407	0.426

자료: Hanvlik and Urban(2003), p. 59.

용이 가장 저렴한 지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무역구조는 당분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이들도 중국에는 임금수준이 EU 평균에 수렴해갈 것이고, 저임지대의 이점을 터키, 크로아티아와 같이 향후 EU의 신규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 넘겨주어야 할 것임.

다) 투자

□ 1995년에서 2001년 사이에 신규 가입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269%나 증가하였음.

- 특히 제조업부문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는 2001년말까지 모든 잔존 투자액의 40%를 차지하는 등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국가별로 볼 때 가장 많은 해외투자를 유치한 국가는 폴란드, 체크, 그리고 헝가리임. 하지만 제조업부문 해외직접투자의 GDP 대비 비율은 체크가 가장 높아 18.2%에 달하고 폴란드,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가 그 다음임(표 17 참고).

□ 투자형태

- 해외투자 중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로는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크, 헝가리 등이며 발틱 3국에 대한 투자는 섬유와 삼림목재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슬로베니아에 대한 투자는 다른 국가들과는 상당히 달라 제지 펄프, 화학, 고무 플라스틱,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산업별로 볼 때 해외 투자는 전기광학장비 및 운송설비 등 수출형 산업뿐만 아니라 식음료와 같이 내수 지향적인 분야에서도 이루어짐으로써 동유럽 국가의 내수를 목표로 행해진 투자도 상당함을 알 수 있음.

□ 1990년대 초반 이후 중동구 국가들의 최대 투자자는 EU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임(표 18 참고).

- चेक 및 슬로베니아에 대한 투자액의 80% 이상은 EU 기업들에 의해 행해졌고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EU 국가로부터의 투자비중은 2/3를 넘는 수준임.
- 개별 국가별로 보면, 중·동구 신규 가입국의 최대 투자자는 독일로서, 독일은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해 최대의

〈표 17〉 신규가입 8개국의 제조업 주요 투자업종

(단위: %)

	주요 투자 업종	제조업 투자비중	GDP 대비 제조업투자
헝가리	식음료 · 담배, 전기광학부품	36.8	8.1
체코 공화국	식음료 · 담배, 전기광학부품, 운송설비	37.6	18.2
슬로바키아	식음료 · 담배, 금속제품	43.8	10.2
폴란드	식음료 · 담배, 운송 설비	41.2	12.2
에스토니아	식음료 · 담배, 섬유, 삼림 · 목재	21.6	11.0
라트비아	식음료 · 담배, 섬유, 삼림 · 목재	17.0	5.1
리투아니아	식음료 · 담배, 섬유	28.8	5.9
슬로베니아	제지 · 펄프, 화학, 고무 · 플라스틱, 기계 · 장비	36.2	6.3

주: 2001년 잔존 기준

자료: Hanvlik and Urban (2003), p. 56에서 정리

〈표 18〉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구성비(1999년)

(단위: %)

국가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EU	82.7	76.9	63.8	74.5	81.2	60.2	56.8
오스트리아	11.5	11.7	2.3	16.9	37.5	4.5	5.1
프랑스	4.7	6.1	11.0	4.2	12.8	3.0	7.1
독일	29.6	28.0	17.3	22.0	12.3	15.3	10.2
이탈리아	0.9	3.2	9.1	1.6	6.6	1.2	7.6
네덜란드	27.1	15.5	9.2	15.0	3.8	6.0	11.6
영국	4.7	6.4	5.9	9.1	4.8	5.7	5.1
기타	4.2	6.0	9	5.7	3.4	24.5	10.1
미국	8.2	12.2	14.7	13.0	4.4	7.1	7.7

자료: UNCTAD(2001)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독일과 함께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는 중 동구 주요 투자국인 반면, 미국은 폴란드에서 독일에 이어 두 번째 투자국이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서 중요한 투자국이지만 독일 등 주요 유럽 투자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적음.

□ EU의 중·동구 투자로 인해 그리스와 포르투갈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스나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투자액이 연평균 10억 달러 아래로 떨어져 1980년대와 같은 호황은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스페인의 경우 매년 EU 국가들로부터 50만 달러 내외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무려 236만 달러를 유치하였음.
- 중·동구 국가가 스페인보다는 상황이 더 열악한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대체 투자대상국으로 기능함.

□ 주요국의 중·동구 투자 형태는 판매보다는 생산에 치중하고 있음.

- 독일은 중·동구 최대의 투자국으로서 1996~99년 사이에 2,328개 독일 모기업이 3,660개의 동유럽 지사를 두고 있음. 이는 1990년에 불과 100개의 지사만을 동유럽에 둔 것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증가세임.
- 투자액의 규모나 매출규모가 여타 지역 자회사보다 작은 반면 피고용인의 수에서는 훨씬 능가함. 이는 이 지역의 낮은 인건비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독일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판매보다는 생산에 더 치중하고 있음을 반영함.

□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투자모국과 수직적 분업체계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나날이 강화되는 투자와 교역간의 관계를 보여줌.

- 교역관계가 활발한 국가에 있어 직접투자가 활성화됨.
- 시장잠재력과 낮은 노동비용, 낮은 관세율이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함(Toubal 2003).

- 자동차산업에서 서유럽 기업의 중·동구 진출도 상기 투자의 원칙이 지켜졌음.
 - 자동차산업에서의 투자형태는 수직적 분업구조를 완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산업의 핵심부문은 그대로 서유럽에 남아 있었음.
 - 이러한 투자가 교역의 증대를 가져와 산업내 무역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가져 왔으나, 중·동구 지역에서의 투자가 향후 지속되기 위해서는 중 동구 국가들이 투자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고 기술 투자를 유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

- 서구 다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서방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어 오면서 신규가입국내에서 투자성과가 차별화됨.
 - 비용조건에 매우 예민한 다국적기업들은 현재 이미 상당히 임금이 상승한 폴란드, 헝가리보다는 그보다 더 조건이 좋은 슬로바키아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 중에 있으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대한 관심도 고조됨.

라) 기타 - 특기사항

- 중·동구 국가들은 EU 가입을 앞두고 산업구조의 극심한 변화를 경험하였음.
 - 체제전환이 시작된 1990년 이후 동유럽 신규가입국 산업구조의 변화를 요약하면 탈농업화, 탈공업화 그리고 3차산업화임.
- 1990년과 비교하여 2001년 8개 중·동구 신규가입국에서 농업부문은 GDP와 고용에서 크게 감소하였음.
 - 하지만 아직도 신규가입국에서의 농업비중은 EU의 농업비중보다 더 높은 편이며, 특히 고용인구로 볼 때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은 매우 높음.

□ 서비스업은 체제전환 이후 크게 증가하였음.

- 서비스업의 비중은 체제전환 초기부터 증가하였지만 절대액과 고용인원에서의 증가는 1995년 이후가 되어서 시작되었음. 향후 이 국가들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계속 증가될 것임.

□ 공업부문은 1990년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음.

- 제조업, 광업, 건설, 수도·전기부문의 생산액과 총부가가치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체제전환 초기 크게 감소하였으며, 1995년에 와서야 다시 회복되기 시작함.
- 아직 많은 국가에서 구체제 당시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였지만 헝가리의 경우 제조업의 생산액은 1995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힘입어 고용에서도 증가세를 보임.

□ 자료가 가능한 1995년 이후만을 볼 때 신규 가입 8개국의 제조업은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표 19 참고).

- GDP 기준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6.4%로서 EU의 성장률보다 4.3%포인트가 더 높은 수준임.
- 고용에 있어서는 매년 2.1%씩 감소함으로써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있어서는 EU의 증가율보다 6.5% 포인트가 더 높은 수준임.

〈표 19〉 신규가입 8개국의 제조업의 발전(1995~2002년)

(단위: %, %pt.)

	연평균 성장률	EU와의 성장격차*
GDP	6.4	4.3
고 용	-2.1	-2.1
생산성	8.7	6.5

주: * percent point

자료: Hanvlik and Urban(2003), p. 39에서 정리.

- 그러나 노동생산성의 이러한 빠른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수준에서는 아직 EU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표 20 참고).
- 가장 생산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헝가리의 경우에도 2001년도 제조업 평균 노동생산성은 EU를 100으로 볼 때 47.9에 불과함. 발틱 3국의 노동생산성은 특히 낮아서 14.9(라트비아), 16.5(리투아니아) 그리고 17.4(에스토니아)에 불과함.
- 2004년부터 공동체 확정 영역이 중·동구 신규가입국에 적용되면 지역적으로는 국경지대, 산업에서는 신규가입국의 철강부문, 또 기업 규모별로 볼 때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표 20〉 신규가입 8개국의 단위노동비용(2001년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연평균 증가율 ¹⁾	3.9	2.5	-1.2	3.9	14.1	2.6	0.8	1.9
수준 ²⁾	38.5	65.6	37.5	66.2	53.6	53.8	32.6	73.9

주: 1) 1995~2001년, 2) 오스트리아(2001년) = 100.

자료 : Hanvlik and Urban(2003), pp. 49-54에서 정리.

- 중·동구 국가들의 산업화와 수렴현상은 EU시장을 놓고 중·동구 국가들을 여타 국가의 주요한 경쟁자로 떠오르게 하였음.
- 체코 공화국은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주요 경쟁자로 떠올랐으며,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폴란드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에스토니아는 덴마크와 스웨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포르투갈 제품과 경쟁관계를 형성함.

3) 요약 및 시사점

-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준비로 이 국가들의 교역 및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 EU가입이 확정됨에 따라 서구기업들의 보다 저렴한 수출기지 모색

이 중·동구지역에 집중되고 있음. 또 중·동구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FDI 유입은 최근 중·동구 경제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EU기업의 중·동구 신규가입국으로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으나 이는 주로 산업의 핵심부문은 그대로 유지한 채 표준적 부품을 생산하는 생산기지로서 중·동구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산업의 수직적 분업이 강화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투자가 무역을 이끄는 산업내 무역이 활성화되었음.

□ 체제전환의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된 이후 EU 가입은 경제성장을 상승시킨 측면이 있음.

□ 소득의 측면에서 EU 가입은 소득 증가를 가져왔으나 그 증가세는 매우 완만함.

- 1990년대 중반 이후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중·동구 신규가입국의 소득수준은 아직 EU 기존 회원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높은 실업률, 막대한 정부재정 수지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더구나 이러한 과정은 국가별로 차별화되어 국가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체제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제도적 기반이 잘 완비된 국가의 경우 경제통합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EU 확대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 역사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성과를 뚜렷이 나타내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임.

-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되어 온 중 동구 신규 가입국의 EU 체제의 편입은 앞으로도 많은 길을 가야 함을 암시함.
- 국가별로 성장 및 소득의 증가 정도는 차이가 남으로써 국가별로

경제통합의 이득은 차별화됨을 알 수 있음.

다. EU · 터키 관세동맹

1) 관세동맹 추진배경 및 요인

- EU와 터키간의 관세동맹(Customs Union)²⁾은 1963년 양자간 교역 및 경제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체결된 제후협정 (Association Agreement) 이 확대 발전된 것으로 1995년 12월 31일 체결되어 1996년 1월부터 발효되었음.³⁾
 - 관세동맹이 추진된 것은 동 협정이 터키의 EU 가입에 대한 전초단계로 기능하기 때문임.
 - 터키는 1923년 공화국 수립 이후 줄곧 유럽에 편입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후 1963년 EEC 준회원국 가입에 이어 1987년에는 EC 정회원국 가입을 신청하였음.
 - 1999년 12월 헬싱키 EU 정상회의에서는 터키를 EU 가입후보국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터키는 EU 가입기준인 코펜하겐기준, 특히 법제 및 인권상황에 대한 기준충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 EU와 터키의 관세동맹은 모든 산업재와 가공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천연 농산물과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됨.
 - 현재 양자간에 기술규범 동일화, 독점철폐, 지적재산권 보호 등 통상적인 관세동맹수준을 넘어선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도 추진되고 있음.

2) 관세동맹은 경제통합단계에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FTA)보다 한 단계 발전된 것으로 역외의 비가입국에 대하여 공동대외관세를 실시함.

3) "Ankara Agreement"로 불리기도 함.

- 터키는 EU와의 관세동맹 외에 EFTA, 이스라엘,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체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그리고 모로코 등과 FTA를 체결하고 있음.
- 또한 터키는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회원국으로서 지중해 연안국과 모두 FTA를 체결하여 2010년까지 “Euro-Mediterranean FTA”를 구성할 계획임.

2) 관세동맹 성과분석 - 득과 실

가) 경제성장

- 터키의 경우 EU와의 관세동맹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며, 관세동맹 이후 겪게 된 경제위기도 관세동맹의 영향보다는 터키경제의 내부적인 불안요인에 의한 것으로 평가됨.
- 터키는 1994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후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확대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와 고인플레이션으로 1998년 또다시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음.
 - EU와 관세동맹하기 이전인 1995년에는 7.2%의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관세동맹 이후에도 1996년과 1997년 각각 7.0%와 7.5%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 1998년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3.1%로 경제성장폭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1999년에도 대지진으로 인해 -4.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에 다시 7.4%의 높은 성장세를 달성

〈표 21〉 터키의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7.2	7.0	7.5	3.1	-4.7	7.4

자료: EIU

하였음.

나) 무역

- EU와 터키의 경우 관세동맹으로 인해 무역이 그 이전보다 크게 증대되는 효과는 없지만, EU는 관세동맹 이전에도 터키의 최대 무역 대상국으로 관세동맹 이후에도 긴밀한 교역관계는 유지되고 있음.
 - 관세동맹 이전인 1995년 터키의 총수출 중 EU의 비중은 51.2%였으며, 2002년에도 51.5%를 차지하고 있어 EU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음.
 - 2002년 말 현재 터키의 주요 수출시장은 EU(51.5%), 미국(9.2%), 러시아(3.3%), 이스라엘(2.4%), 루마니아(1.6%), 사우디아라비아(1.5%)이며, 터키로부터의 총수출의 41.4%는 섬유 관련 제품이며 이외 운송재료(13.4%), 농산물(9.5%), 사무기기 및 통신설비(6.6%)임.
 - 수입을 보면 터키 총수입 중 EU의 비중은 1995년 47.2%에서 2000년에는 48.9%로 소폭 증가하였다가 2002년에는 45.5%로 다소 감소하는 등 관세동맹 이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음.
 - 2002년 말 현재 주요 수입시장은 EU(45.5%), 러시아(7.6%), 미국(6%), 스위스(4.1%), 일본(2.8%), 중국(2.7%), 알제리(2.1%)이며, EU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은 기계(29.7%), 화학제품(19.1%), 운송기계(14.2%)임.
 - 이와 같이 터키의 경우 교역에서의 EU 비중은 관세동맹 이후 큰

〈표 22〉 EU의 對터키 무역 추이

(단위: 10억 유로)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출	9.3	13.4	18.3	22.4	22.2	20.6	30.0	20.3	24.3
수입	7.9	9.2	10.2	11.9	13.6	15.1	17.5	20.2	22.0

자료: Eurostat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었으며, 소폭의 변동은 터키의 통화가치나 경제의 불안정에서 비롯된 것임.

- EU의 경우에도 관세동맹으로 인해 터키와의 큰 교역증대효과는 없었으며, 교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수준 정도임.
- EU의 전체 수출 중 터키의 수출비중은 1995년 2.3%에서 관세동맹 이후 1996년에는 2.9%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2년 말 현재에는 2.4%로 관세동맹 이전보다 비중이 확대되지 않고 있음.
- 수입도 EU의 전체수입 중 터키의 비중은 1995년 1.7%에서 2002년 2.2%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음.
- 다만 2002년 현재 터키는 EU의 10대 수출대상국이자 11대 수입대상국으로 1990년 EU의 9대 수출대상국 및 17대 수입대상국인 점을 감안하면 관세동맹효과가 미미하나마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 투자

- 관세동맹 이후 EU로부터의 투자가 증대되고 있음.
- 관세동맹에 따른 관세 및 각종 규제철폐로 인해 터키의 투자환경이 여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해졌음.
- 관세동맹 이전 1995년 EU의 對터키 투자액은 3억 5천만 유로 상당에서 관세동맹 이후 1996년과 1997년에는 각각 4억 유로와 6억 유로 상당으로 차츰 증가하다가 1998년부터는 10억 유로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터키의 불안정한 정치 및 투자환경과 부정부패 등으로 EU

〈표 23〉 EU의 對터키 해외투자

(단위: 10억 유로)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0.389	0.350	0.405	0.688	1.116	1.164	1.747	1.400

자료: Eurostat.

의 對터키 투자는 여타 폴란드나 헝가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향후 EU로부터의 투자유인을 위해서는 투자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라) 기타 - 특기사항

- 1996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EU와 터키간의 관세동맹은 일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터키의 기술적 규제와 같은 무역장벽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 EU와 터키간의 관세동맹에서는 2000년 말까지 모든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할 것을 전제로 하였지만, 터키는 반덤핑조치나 정부보조금 지원과 같은 미해결분야를 아직 갖고 있음.
- 무엇보다 터키의 최대 산업인 섬유 및 의류산업부문에서의 수입규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산업부문에서 양자간 무역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EU에 대한 터키의 섬유 및 의류 관련 수출은 관세동맹 이전인 1995년에는 43억 유로였으나, 1999년에는 65억 유로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75억 유로로 1995년에 비해 75%의 증가세를 보였음.
 - 터키의 섬유 및 의류부문에서의 무역흑자는 2000년 58억 유로로 1995년 무역흑자에 비해 65% 증가세를 보임.
 - 이에 반해 터키의 전체 섬유 및 의류부문에서의 수입 중 EU로부터의 수입비중은 1995년 9.5%에서 2000년 10.8%로 소폭 증가에 그쳐 동 산업분야에서 무역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음.

3) 요약 및 시사점

- EU와 터키간 관세동맹의 경우 교역증대효과는 미미하지만 긴밀한 교역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며, 터키는 투자분야, 제도의 선진화 등에

서 관세동맹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음.

- 터키의 경우 관세동맹에 따른 경쟁증대로 보다 다양하고 고품질의 저렴한 제품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EU의 기술규범에 준하는 법규를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보호정책도 강화되었음.

□ EU·터키간 관세동맹이 한국의 향후 FTA 추진정책에 있어 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첫째, 터키의 경우 1998년 경제위기를 겪을 당시 EU 외의 수출대상국에 대한 수출은 감소한 반면, EU에 대한 수출은 관세동맹으로 크게 감소하지 않아 경제위기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들이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었음.

- 터키의 전체수출 중 EU의 비중은 1997년 46.6%에서 1998년에는 50%, 1999년에는 53.9%로 경제위기시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EU로부터의 수입비중도 안정적으로 51~52%를 유지하였음. 이에 반해 EU외 비OECD 회원국에 대한 터키의 수출은 1997년 40.7%에서 1998년 37.1%, 1999년 29.2%로 크게 감소하였음.

- 이는 한국이 FTA를 통해 경제위기 당시 교역감소효과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비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둘째, 터키가 EU와 같은 큰 시장과의 관세동맹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러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관세동맹 이전인 1993년, 1994년, 1995년 터키의 총무역적자 중 EU의 비중은 각각 44.56%, 44.15%, 41.09%이었으며, 2000년에도 45.15%로 관세동맹으로 인한 무역적자 확대현상은 없었음.

- 터키의 EU로부터의 수입도 소비재 수입은 전체수입 중 10% 안팎이며 90%가 자본재, 반제품, 원재료로 터키의 생산활동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수입구조는 관세동맹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있음.

라. EU·남아프리카공화국 FTA

1)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유럽과의 경제적 유대관계, 아프리카에서의 중요성, 산업 구조의 보완성 등에서 EU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로 알려져 있음.
 - EU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정치·경제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발판으로 아프리카시장으로의 진출 및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자 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EU의 최대무역국이며,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대국인 동시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유망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EU와의 FTA 체결을 통하여 세계시장으로의 진출과 경제·기술협력의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및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4년 만델라 대통령 취임 후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면서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대 무역·투자 파트너인 EU와의 경제·기술협력 강화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가는 데 필수적임.
- 이러한 가운데 EU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5년 6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1999년 11월에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TDCA)에 양국이 최종적으로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은 2000년 1월부터 발효되었음.

2) FTA협정을 전후한 성과분석 - 득과 실

가) 경제성장

- EU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TDCA협정이 발효된 2000년 양국의 경제 성장률은 각각 3.7%와 3.5% 등 다른 연도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EU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음.⁴⁾
 - 2000년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 내외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주고 있음.

〈표 24〉 EU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EU	2.9	2.8	3.7	1.8	1.1
남아공	0.8	2.0	3.5	2.8	3.0

자료: Glocal Insight; Online Analysis, EIU. Country Report 각월호

나) 무역

- EU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체결한 TDCA가 발효되기 시작한 2000년에는 다른 연도에 비해 수출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FTA가 양국의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TDCA가 발효된 2000년, EU의 對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은 전년에 비해 20.4% 증가하고, EU의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5.3% 증가하였음.

4) FTA의 체결에 따른 시장확대가 기업들간의 경쟁 촉진 및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시간을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FTA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다 할 수 있음. 따라서 EU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TDCA가 발효된 지 3년을 조금 넘는 상황에서 TDCA 체결이 양국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한 측정은 어렵다고 판단됨.

〈표 25〉 EU와 남아프리카공화국 교역 추이

(단위: 100만 유로, %)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출액	10,475	9,731	11,715	12,480	12,456
수출증가율	7.5	-7.1	20.4	6.5	-0.2
EU 전체대비 비중	1.4	1.3	1.2	1.3	1.2
수입액	9,772	10,700	14,475	16,018	15,635
수입증가율	6.9	10.0	35.3	10.7	-2.4
EU 전체대비 비중	1.4	1.4	1.4	1.6	1.6
무역수지	753	-969	-2,760	-3,538	-3,179

자료: Eurostat, *External and Intra-European Union Trade*.

- 또한 EU의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의 수입이 EU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4%, 2000년에는 1.4%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2001년과 2002년에는 1.6%로 증가한 반면, EU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이 EU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EU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무역수지의 적자가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특수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개방시기 및 개방품목의 범위 등에 있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한 결과임.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입장에서는 EU와의 무역수지에서 큰 폭의 흑자를 누리고 있는 한편, EU 시장진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FTA 시행 초기부터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투자

- TDCA가 발효된 2000년 이후 EU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대국에 대

〈표 26〉 EU와 남아프리카공화국 FDI 추이

(단위: 100만 유로)

연 도	1999	2000	2001
EU의 對남아공 직접투자	2,933 (1.3)	1,249 (0.4)	7,331 (2.0)
남아공의 對EU 직접투자	-115 (-0.1)	590 (0.5)	1,526 (0.9)

주: () 안의 수치는 EU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European Commission

한 FDI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또한 EU 전체에서 차지하는 투자비중 또한 증가하여 FTA의 체결로 인한 투자가 확대되었다고 평가됨.

- TDCA가 발효된 2000년 EU의 對남아프리카공화국 직접투자는 1999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01년에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EU 전체에서 차지하는 투자비중도 2.0%를 기록하여 1999년 1.3%, 2000년 0.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FDI)는 FTA 체결에 따라 단시간내에 나타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는 동태적인 효과에 해당이 되므로 2001년의 EU의 對남아프리카공화국 투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때 2000년 EU의 직접투자액 감소는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對EU 직접투자는 2000년부터 플러스로 반전하여 점차 확대되었으며, EU 전체에서 차지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對EU 투자비중 또한 1999년 -0.1%에서 2000년 0.5%, 2001년 0.9%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라) 기타 - 특기사항

- EU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TDCA 추진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 구조개혁 추진과정을 고려하여 시장개방속도 및 개방상품의 범위에

양국간 차이를 두는 한편, 자국에 민감한 품목들은 무역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킴.

- EU는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시장개방의 속도를 더 가속화하고 수입자유화 상품의 범위도 더 확대하여 개방하였는바, EU는 10년내에 남아프리카공화국産 상품의 95%를 수입자유화하는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2년내에 EU産 상품의 86%를 수입자유화하기로 함.

- EU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체결한 TDCA는 FTA(Free Trade Area)를 통한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기술분야에 대한 협력 및 금융지원 그리고 정기적인 정치적 대화(political dialogue) 개최 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무역, 개발 및 협력협정임.

-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능력배양 고양과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위한 것임.

3) 요약 및 시사점

- EU와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FTA는 2000년부터 발효되어, 현재 그 성과를 논의하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지만 무역 및 투자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FTA의 추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EU의 對남아프리카공화국 교역량은 FTA 체결 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투자 부문 또한 EU 전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있어,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무역·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거대시장인 EU와의 FTA의 추진을 통해 對EU 시장 진출을 점차 확대하고 있어, 거대시장과의 FTA 추진이 시장확대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EU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FTA 추진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특수

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유화 추진시기 및 자유화 품목 등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능력배양 고양을 위해 경제기술 협력 및 금융지원 그리고 정치적 대화 개최 등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였음.

- 그 결과 현재 FTA 추진에 따른 무역·투자부문의 혜택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무역수지의 경우는 큰 폭의 적자를 보고 있음.
 - EU가 현재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TDCA협정을 추진한 이유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제 및 정치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아프리카의 최대경제국이자 유망 신흥시장인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의 진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발판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EU의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FTA 체결은 아프리카시장 진출의 성공적인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음.
-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개방속도 및 상품의 범위에 있어 EU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장개방을 추진하였으며, 게다가 EU로부터 다양한 경제·기술협력 및 금융지원까지 얻어내는 협상력을 발휘하였음.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세계의 최대 경제체인 EU를 대상으로 TDCA라는 포괄적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시장으로의 진출 모색 및 자국의 경제개혁과 산업구조의 선진화 추진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적 안정의 기회로 활용하였음.
 - 즉 개방에 따른 자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경제개방을 통하여 자국경제의 구조개혁 및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거시적인 안목과 협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음.

4. MERCOSUR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1) MERCOSUR 개관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 (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FTA)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Customs Union) 형태로 발전했으며 2006년 공동시장을 결성을 목표하고 있음.
 - 현재 관세동맹 수준인 MERCOSUR는 칠레(1996년), 볼리비아(1997년), 페루(2003년) 등과 FTA협정을 체결했음.
 - 2004년 7월부터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와도 FTA를 발효할 예정임.
- MERCOSUR의 경제규모는 2002년 말 현재 인구 2억 2,180만 명, GDP 규모 5,722억 달러임.
 - 특히 예정대로 2004년 7월 남미 10개국을 포괄하는 남미자유무역지대(Sou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SAFTA)가 출범할 경우, MERCOSUR 경제규모는 인구 3억 5,310만 명, GDP 9,004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 MERCOSUR의 세계경제적 위상
 -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MERCOSUR의 물리적 비중(인구비중 4.3%, 면적비중 8.9%)은 상당히 높은 데 반해, GDP, 수출입 등 경제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표 27〉 MERCOSUR의 경제규모(2002년 기준)

	인구	면적	GDP	GDP 구매력 기준	1인당GDP	1인당GDP 구매력기준	수출	수입
	백만 명	천 km ²	10억 달러	10억 달러	달러	달러	10억 달러	10억 달러
아르헨티나	37.8	2,780	102.0	404.2	2698.6	10689.0	25.7	8.5
브라질	176.0	8,547	452.4	1341.4	2569.9	7620.0	60.4	47.2
파라과이	5.0	407	5.5	29.0	954.0	3365.0	2.3	2.4
우루과이	3.0	176	12.3	28.0	3648.0	7485.0	1.9	1.9
MERCOSUR(a)	221.8	11,910	572.2	1802.6	2,476.6	7,290.0	90.3	60.0
칠레	15.1	757	66.4	156.1	4413.6	10373.5	18.3	15.8
볼리비아	9.0	1,099	7.8	19.0	884.0	3403.0	1.3	1.5
콜롬비아	43.8	1,139	81.1	282.0	1850.3	6434.4	12.3	12.1
에콰도르	12.4	284	24.4	45.6	1972.8	3683.1	5.2	6.2
페루	26.7	1,285	56.9	135.0	2126.4	5048.4	7.6	7.4
베네수엘라	24.3	912	91.6	135.8	3772.4	5590.9	26.2	12.3
CAN	116.2	4,719	261.8	617.4	2,121.2	4,832.0	52.6	39.5
SAFTA(b)	353.1	17386.0	900.4	2576.1	2,489.0	6,369.2	161.2	115.3
전 세계(c)	5115.8	133,883	31312.7	46580.9	6120.8	9105.4	6,045.50	5,978.70
비중(a/c)	4.3	8.9	1.8	3.9	-	-	1.5	1.0
비중(b/c)	6.9	13.0	2.9	5.5	-	-	2.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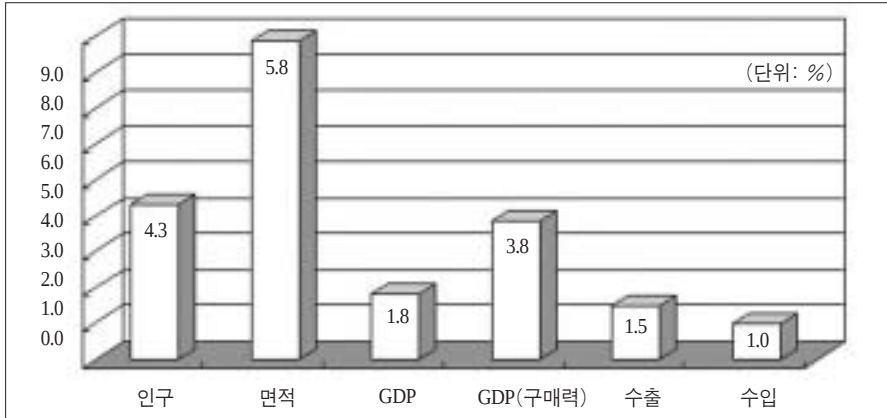
자료: EIU Viewswire(2003); World Bank(2003), *World Development Indicator*.

-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은 1.8%, 수출비중은 1.5%, 수입비중은 1.0%에 불과함.
- 그러나 구매력 단위(PPP) 기준으로 볼 때 MERCOSUR의 실질적인 시장규모는 1조 8,026억 달러(세계경제비중 약 4%)에 달하는 거대 시장임.

2) FTA 추진 배경 및 요인

- 남미 각국은 1990년대 들어 경제자유화, 민영화, 규제 완화로 대변되는 시장지향적 경제개혁과정에서 무역자유화 조치와 병행하여 지역경제통합을 추구해 왔는바, MERCOSUR의 설립배경은

〈그림 2〉 MERCOSUR의 세계경제 위상



- 먼저 정치적 민주화에 따라 상호 신뢰 구축과 경제협력의 강화 분위기 속에서 종래의 경쟁적 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지역협력 의식 고취,
- 둘째,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이 종래의 대내지향적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대외지향적인 수출 주도형 전략으로 전환,
- 셋째, 유럽의 통합 심화, NAFTA 출현, ASEAN 통합 심화 등 세계 무역질서의 지역주의화 대두,
- 넷째, 냉전종식 후 구공산권의 세계경제 참여와 서유럽의 동유럽 개발참여로 중남미 국가들이 이미 동아시아 개도국들과 벌여 오던 원조, 차관, 외국인투자, 기술유치 등 이른바 자본유치 경쟁 가속화 등으로 대별됨.

□ MERCOSUR 공식 출범 이전까지 과정

- 1985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촉구하는 「이과수 선언」 발표.
- 1986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양국간 경제통합프로그램 (Argentina-Brazil Economic Integration Program: ABEIP)을 수립하여 경

- 제통합 및 협력사업에 관한 12개의 의정서 채택
- 1988년 11월에 양국은 「통합협력발전조약(Treaty for Integration,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을 체결, 점진적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거시경제정책의 조율을 통해 향후 10년내에 양국간 공동시장을 창설기로 합의
 - 1990년 7월 6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양국의 민영화, 개방화 정책의 촉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장통합을 1995년 1월 1일까지 완결짓기로 합의한 「부에노스아이레스협정」을 체결했음.
 - 1991년 3월 26일, 파라과이와 우루과이가 지역통합체 창설에 참여기로 함에 따라 이 4개국 정상들은 1995년 1월 1일을 기해 역내관세를 철폐하고 대외공동관세를 설정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아순시온협정」을 체결했음.
-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한 MERCOSUR은 1995년 관세동맹형태로 발전하면서 역내 교역 확대를 통해 내연적 발전을 도모해 옴.
- MERCOSUR는 1994년 「오우루쁘레투 의정서(Protocol of Ouro Preto)」 체결을 통해 관세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음.
 -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제도(Regime of Adequation)를 설정, 1999년 말까지 점진적, 자동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함.
 - 이 결과 MERCOSUR는 2000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및 설탕 등 일부 특수 예외품목을 제외하고 쏘 품목에 대해 무관세 거래를

〈표 28〉 MERCOSUR 역내 관세인하 일정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1995년 1월	초기 관세인하 개시	-
1996년 1월	25%	초기 관세인하 개시
1997년 1월	50%	25%
1998년 1월	75%	50%
1999년 1월	100%	75%
2000년 1월	100%	100%

시현해 오고 있음.

- MERCOSUR는 1995년 1월 1일부터 역외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0~20%의 공동관세를 부과하기 시작, 관세동맹의 형태를 띠게 되었으며 2006년까지 완전한 관세동맹을 달성한다는 목표임.
- 대외공동관세 적용 예외품목: 자본재(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2001년 1월 1일까지,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의 경우 2006년 1월 1일까지 14%로 대외공동관세 통일), 컴퓨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와 위성통신(2006년 1월 1일까지 16%로 일치)
- 자동차와 설탕은 특별 예외품목으로 분류, 현재 관세동맹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임.

〈표 29〉 MERCOSUR내 주요 품목의 평균 대외공동관세

(단위: %)

부문	평균 대외공동관세
광물제품	2.4
화학제품	7.2
농업제품	7.5
플라스틱제품	11.9
전기제품	12.6
식음료	14.7
수송재료	14.9
섬유	17.1

자료: 아르헨티나 외무부 국제경제센터(CEI)

〈표 30〉 MERCOSUR 회원국들의 평균 대외관세

(단위: %)

	1985	1991~92	1994~95	1997~99	2002
아르헨티나	26.0	15.0	11.9	13.8	12.2
브라질	80.0	21.1	12.3	14.6	12.3
파라과이	71.7	16.0	10.2	9.5	10.7
우루과이	32.0	12.0	10.5	10.0	11.4

자료: 아르헨티나 외무부 국제경제센터(CEI)

- MERCOSUR는 현재 불완전한 관세동맹단계이나 2006년 이후 공동 시장단계로 발전키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역내 상호투자보장협정 체결(1993년 12월)
 - 역외국의 투자촉진협정 체결(1994년 8월)
 - 역외 수입품에 대한 공동 세이프가드 조항 도입(1995년 12월)
 - MERCOSUR 단일여권제 도입(1997년, 2001년부터 시행)
 - 역외산 제품에 대한 공동 반덤핑 규정 도입키로 합의(1997년 12월)
 - 2007년까지 서비스교역에 대한 단계적 자유화 합의(1997년 12월 몬테비데오 의정서)
 - 정부조달부문 개방 검토를 위한 특별그룹 설립(1997년)
 - 회원국간 대학학위의 상호인정에 관한 양해각서 합의(1998년)
 - 역내 노동자의 개인적, 집단적 권리를 보호하는 노동자권리선언 합의(1998년 12월)
 - 거시경제정책의 조화를 위해 인플레이, 재정수지 등 회원국간 거시경제정책 목표 합의(2000년 12월 남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목표 합의).
 - 통상분쟁을 전담할 보다 진일보한 형태의 상설재판소(Permanent Tribunal of Review) 설립에 합의(2002년)
 - MERCOSUR 공동통화 도입 논의 합의(2003년)
 - MERCOSUR 공동의회 창설 논의 합의(2003년)
 - 부에노스아이레스컨센서스 채택(2003년 10월)⁵⁾
 - MERCOSUR 위원회(MERCOSUR Commission of Representative) 설립(2003년 12월)⁶⁾

5)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상은 부에노스아이레스컨센서스를 채택, 앞으로 전개될 WTO와 FTAA협상에서 양국이 공동의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했음. 同 컨센서스의 주요 내용은 WTO와 FTAA 등 다자협상에서 공동의 입장 견지 사회적 평등을 수반한 경제성장 추구 MERCOSUR, 미국 및 EU간 보다 균등한 무역규범 마련 MERCOSUR가 제안한 FTAA협상방식 고수 새로운 경제모델(경제성장, 사회정의 및 시민의 존엄)을 토대로 한 남미통합 추구 등임.

- 이외에도 MERCOSUR는 통합 공고화를 위해 에너지, 도로 및 수송 등 산업부문의 통합도 아울러 추진해 오고 있음.
 - 특히 MERCOSUR는 남미지역의 통합 공고화 및 확대를 위해 남미 지역인프라통합사업 (Initiative for Regional Infrastructure in South America: IIRSA)을 실시해 오고 있는바, 총 160~200개 사업에 230억 달러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 한편 MERCOSUR는 2005년 출범을 목표로 세계 최대 통합체가 될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1999년부터 EU와도 FTA협상을 진행시켜 오는 등 외연적 확장을 도모해 오고 있음.
 - 특히 2003년 말에는 볼리비아, 페루와 FTA를 기체결한 상태에서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안데스공동체(CAN) 3개국과 추가적인 FTA를 체결, 1990년대 중반 이후 추진해 온 MERCOSUR·CAN간의 FTA를 성사시켰음.
 - 또한 역외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2000년) 및 인도(2003년)와도 FTA의 전 단계인特惠무역협정을 체결했음.

나. FTA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1) 경제성장

- 경제통합의 심화는 기본적으로 회원국간 거시경제지표의 수렴화·동조화 현상으로 표출됨.
 - MERCOSUR의 경우 통합 초기 회원국간 거시경제지표의 동조화

6) 초대 위원장에 두알데(Eduardo Duhalde) 아르헨티나 前 대통령을 임명. 위원장의 역할은 경제통합사업 및 제3국과의 협상 제시 회원국간 경제사회 및 의회협력 강화 제3국 및 국제기구에서 MERCOSUR을 대표하는 것 등임.

〈표 31〉 MERCOSUR 4개국의 경제성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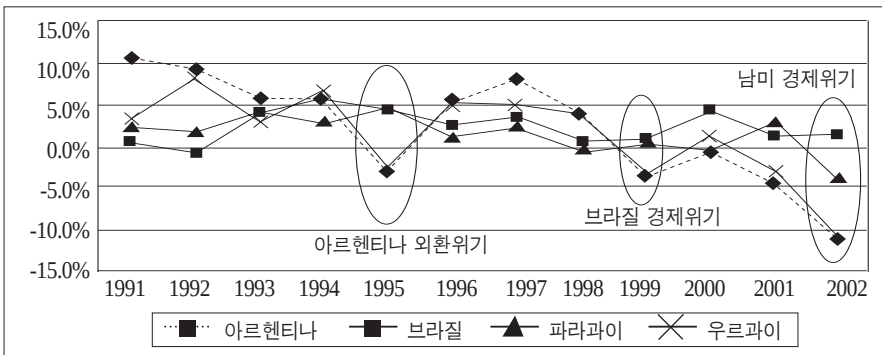
(단위: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아르헨티나	10.6	9.6	5.7	5.8	-2.8	5.5	8.1	3.9	-3.4	-0.8	-4.4	-10.9
브라질	0.3	-0.8	4.2	5.7	4.2	2.7	3.3	0.1	0.8	4.4	1.4	1.5
파라과이	2.5	1.8	4.1	3.1	4.7	1.3	2.6	-0.4	0.5	-0.4	2.7	-3.9
우루과이	3.2	7.9	3.0	6.8	-2.4	4.9	5.1	4.5	-3.2	1.1	-3.1	-10.8

자료: 아르헨티나 외무부 국제경제센터(CEI)

〈그림 3〉 MERCOSUR 회원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현상은 비교적 미미했으나 회원국간 교역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동조화 현상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남.

- 비교적 통합 출범 초기인 1995년 멕시코 외환위기 전염효과로 발생한 아르헨티나 경제위기가 역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 1999년 브라질 경제위기 여파는 연이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로 확대, 회원국 모두의 경제위기로 발전했음.

2) 무역

- MERCOSUR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하여 1995년 관세동맹의

단계로 발전하는 가운데 이룩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역내교역의 증가였음.

- 이에 따라 1999년 브라질 경제위기로 역내 수출이 크게 감소하기 직전까지인 1990~98년 기간 MERCOSUR의 역내수출이 393%나 증가한데 반해, 총수출은 75.2%, 역외수출은 44.2% 증가하는 데 그쳤음.
- 이에 따라 1990년 MERCOSUR 출범 직전 8.9%에 불과했던 회원국의 역내 수출비중은 1998년에는 25%로 증가했음.
- 회원국별로는 파라과이의 역내 수출비중이 60%대까지 확대, 가장 높은 의존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우루과이 55%(최고비중 기준), 아르헨티나 36%, 브라질 17%順으로 높은 역내 수출의존도를 나타냈음.

□ 그러나 1999년 브라질 경제위기 이후 연이어 발생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의 경제위기는 역내 회원국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야기, 역내 수출을 크게 감축시켰음.

- 특히 1999년 브라질 해알화 평가절하조치로 발생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통상분쟁은 MERCOSUR의 역내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MERCOSUR 前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증폭

〈표 32〉 MERCOSUR의 수출 추이

(단위: 100만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아르헨티나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브라질	1,320	2,309	4,097	5,387	5,921	6,154	7,305	9,047	8,878	6,778	7,733	6,364	3,311
파라과이	380	259	246	287	377	528	655	584	524	307	553	519	553
우루과이	594	558	544	699	899	992	1,153	1,355	1,533	1,007	1,022	840	610
역내수출	4,126	5,104	7,215	10,057	12,001	14,443	17,030	20,583	20,349	15,157	17,699	15,214	10,058
역외수출	42,306	40,807	43,273	43,986	50,113	56,051	57,969	62,656	61,007	58,458	66,887	72,668	78,454
총수출	46,432	45,911	50,488	54,043	62,114	70,494	74,998	83,239	81,356	73,615	84,586	87,882	88,511

자료: 아르헨티나 외무부 국제경제센터(CEI)

〈표 33〉 MERCOSUR의 역내 수출비중 추이

(단위: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역내 총수출	8.9	11.1	14.3	18.6	19.3	20.5	22.7	24.7	25.0	20.6	20.9	17.3	11.4
아르헨티나	14.8	16.5	19.0	28.1	30.3	32.3	33.2	36.3	35.6	31.2	31.9	28.2	21.7
브라질	4.2	7.3	11.4	14.0	13.6	13.2	15.3	17.1	17.4	14.1	14.0	10.9	5.5
파라과이	39.6	35.2	37.5	39.6	46.2	57.4	62.8	53.7	51.7	41.5	63.6	52.4	58.1
우루과이	34.8	35.5	33.6	42.5	47.0	47.1	48.1	49.7	55.4	45.0	44.6	40.8	32.8

자료: 아르헨티나 외무부 국제경제센터(CEI)

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했음.

- 이 결과 2002년 말 현재 MERCOSUR 역내 수출은 1993~94년 수준으로 후퇴했으며 역내 수출비중도 11%대로 급락했음.

- 결과적으로 회원국간 교역의 상호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발생한 역내교역의 갑작스러운 위축은 경제위기 전염효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의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 회원국의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

3) 투자

- 1990년대 남미지역의 경제적 안정 및 민영화 등 외국인투자 개방과 더불어 MERCOSUR가 경제통합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면서 1980년대 크게 주춤했던 외국인투자가 급증했음.
 - 통합 이전 연평균 20억 달러에 불과했던 FDI 유입은 1995년 MERCOSUR가 관세동맹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크게 증가, 100억 달러대로 급증했으며, 1999년에는 529억 달러로 최고점에 달했음.
 - 이 같은 외국인투자 급증에 힘입어, FDI 대상지로서 MERCOSUR의 위상도 크게 제고되었음.
 - 통합 이전 1%대에 불과했던 세계 FDI시장에서 차지하던 MERCOSUR의 위상은 1997년 6%로 확대되었음.

〈표 34〉 MERCOSUR FDI 유입 추이

(단위: 100만 달러, %)

	1986~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아르헨티나	1168	4045	2555	3116	4783	5090	9160	7291	23988	11657	3206	1003
브라질	1258	2061	1291	2149	5043	11112	18993	28856	28578	32779	22457	16566
파라과이	31	137	111	180	184	225	236	342	95	104	95	-22
우루과이	41	58	173	155	157	169	126	164	238	274	318	85
MERCOSUR(a)	2498	6301	4130	5600	10167	16596	28515	36653	52899	44814	26076	17632
개도국(b)	29090	51108	72528	95582	105511	129813	193224	191284	229295	246057	209431	162145
전 세계(c)	159331	175841	217559	242999	331189	337550	481911	686028	1079083	1392957	823825	651188
비중(a/b)	8.6	12.3	5.7	5.9	9.6	12.8	14.8	19.2	23.1	18.2	12.5	10.9
비중(a/c)	1.6	3.6	1.9	2.3	3.1	4.9	5.9	5.3	4.9	3.2	3.2	2.7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8 and 2003*.

- MERCOSUR 출범 이후 외국기업의 역내 투자 진출 증가뿐만 아니라 회원국간의 상호 투자도 크게 증가했음.
 - 1990년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간의 상호 투자는 22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 중 54%는 브라질기업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였으며 46%는 아르헨티나기업의 브라질에 대한 투자였음.
 - 특히 통합 이전 수출금융 등에 제한되었던 상호 투자가 생산부문으로 확대되었으며 투자방식도 M&A 등으로 다각화되었음.
- MERCOSUR 출범 이후 역내 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물론 역내 소국인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도 반사적으로 FDI 확대의 이득을 얻었으나 대부분의 FDI는 역내 대국에 집중되었음.
 - 통합 이전(1986~91년) 각 회원국의 FDI 유입 비중은 각각 아르헨티나 46.8%, 브라질 50.4%, 파라과이 1.2%, 우루과이 1.6%에서,
 - 통합 이후(1992~2002년 누계 기준) 同 비중은 아르헨티나 30.4%, 브라질 68.1%, 파라과이 0.07%, 우루과이 0.08%로 나타났음.
 - 특히 1999년 브라질의 헤알화 평가절하 이후, 인건비가 저렴해지는 등 브라질의 투자여건이 상대적으로 개선되면서 아르헨티나에 진

출했던 수십 개의 다국적기업이 브라질로 투자선을 변경, 아르헨티나에서는 경기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발전되었음.

4) 기타

□ 대외협상력 제고

- MERCOSUR 경제통합의 두드러진 성과 중의 하나는 대외협상력 제고임.
- 1995년 관세동맹형태로 발전하면서 MERCOSUR는 대외협상에서 공동의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음.
- 이에 따라 제고된 MERCOSUR의 대외협상력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과 EU와의 FTA협상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음.
- 특히 MERCOSUR는 강화된 협상력을 바탕으로 WTO 등 다자협상 무대에서도 통합체의 이해 확대를 위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다.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출범 이후 개도국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어 왔음.
- MERCOSUR는 초기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로 출범, 1995년 불완전한 형태지만 관세동맹(Customs Union)단계로 발전했으며, 2006년 공동시장(Common Market)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MERCOSUR는 출범 이후 역내 교역 확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급증 등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명실상부한 경제통합체로 자리매김했음.

- 이 같은 MERCOSUR의 발전은 1990년대 중반 칠레와 볼리비아가 연이어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고, MERCOSUR가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의 명실상부한 협상 주도국으로 부상하면서 더욱 공고해지 는 듯했음.
- 그러나 1990년대 MERCOSUR가 거둔 괄목할 성과는 1999년 브라질 의 급격한 헤알화 평가절하 이후 촉발된 브라질·아르헨티나간 통상 분쟁과 연이어 발생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경제위기 여파로 MERCOSUR가 정체성의 위기를 맞으면서 빛이 바랬음.
- 이에 따라 많은 대내외 전문가는 성급하게 MERCOSUR의 발전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豫斷하거나 심지어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음.
- 2002년까지 팽배했던 MERCOSUR 前途에 대한 비관적 시각은 2003 년 이후 조금씩 바뀌고 있음.
- 이 같은 시각의 변화는 MERCOSUR 공고화에 대한 회원국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 회원국의 거시경제적 안정과 수렴, FTAA 출범 임 박감에 따른 역내 회원국의 결속 강화를 통해 推動되고 있음.

2) 시사점

- 경제통합의 성패는 회원국간 거시경제정책의 조화와 안정이 관건
- 1991년 출범 이후 1998년까지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MERCOSUR 경 제통합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존폐의 기로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회원국간 거시경제정책의 차이 및 거시경제적 불 안정에 연유함.
- 특히 1999년 이후 촉발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간의 통상분쟁은 브 라질의 헤알화 평가절하 이후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아르헨 티나간 환율정책 차이에 따른 무역불균형에서 비롯되었음.

-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되어온 회원국들의 연이은 경제위기는 경제통합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경제통합 발전을 저해시키는 주요인으로 작동함.
 - 이에 대처키 위해 MERCOSUR는 EU의 마스트리트조약을 본뜬 「미니 마스트리트조약」을 체결, 거시경제정책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3년 들어서는 공동통화도입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음.
- 경제통합 심화에 따른 회원국간 지나친 수출의존도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양산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
- 경제통합의 1차적 성과는 무세화에 따른 역내 회원국간 교역의존도 심화로 나타남.
 - 그러나 MERCOSUR의 예에서 보듯 일부 회원국에 대한 지나친 수출의 편중은 회원국간의 거시경제적 변동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양산시킴.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ERCOSUR은 수출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域内外 국가들과 각종 FTA를 통해 외연적 확장을 도모해 오고 있음.
- 경제통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외무역에 관한 회원국의 자의적인 규제가 사라져야 하며, 분쟁 발발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이며 제도적인 분쟁해결기구가 존재해야 함.
- 사실 엄밀한 의미의 경제통합발전 측면에서 MERCOSUR는 아직까지 완전한 자유무역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한 상황임.
 - 현재 회원국 교역대상품목 중 설탕과 자동차(자동차부품 포함) 품목이 실질적인 자유무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총교역대비 자유무역의 비중은 80%를 조금 상회하고 있는 수준임.⁷⁾

7) 2001년 기준으로 역내교역에서 차지하는 자동차(자동차부품 포함)품목의 비중만 17%에 달하고 있음.

- 또한 MERCOSUR는 1995년 관세동맹형태로 발전하면서 대외공동관세를 도입했으나 대외공동관세 적용범위는 회원국들의 빈번한 “일시적 대외공동관세 적용 중단” 요구로 역외 총수입품목의 60%에 불과한 실정임.⁸⁾
 - MERCOSUR의 경우 현재까지 회원국간 대부분의 통상마찰은 정상간의 회담 등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이 모색되어 왔으나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방식의 문제해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경제통합체 차원의 초국가적인 분쟁해결기구의 설립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음.
 - 다행히도 MERCOSUR 회원국들은 2002년 경제위기 와중에도 그간 누차 MERCOSUR의 제도적 취약성을 지적되어 온 통상분쟁을 전담할 보다 진일보한 형태의 상설재판소(Permanent Tribunal of Review) 설립에 합의했음.
- 회원국간 경제통합은 경쟁의 종식이 아닌 새로운 경쟁의 시작임.
- 국가적 차원에서 FTA 체결은 국가간 도모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정점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회원국간 경제통합은 경쟁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경쟁의 시작임을 명시해야 함.
 - FTA 결성의 경제적 효과를 무역효과와 투자효과로 단순 대별해 볼 때 무역측면에서는 그간 관세로 가로막힌 장벽이 철폐되면서 회원국 수출기업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그러나 투자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인접국간 FTA 결성의 경우 회원국들은 FDI 유치를 위해 상호 경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
 - 이의 단적인 예는 MERCOSUR의 경우에서도 입증됨.
 - MERCOSUR 회원국들은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유리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는바, 이는 종종 회원국간 통상분쟁으로 비화되곤 했음.

8) 대외공동관세 적용범위는 1995년 관세동맹 출범 당시 85%에 달했음.

5.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1) 추진배경

- AFTA의 개념은 1971년 3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 경제 장관회의(AEM)에서 마르코스 필리핀 前 대통령이 최초로 제시한 바 있음.
 - 또한 1981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2회 ASEAN 정상회담에서 필리핀 정부가 향후 10년 이내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당시에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였음.
- 그러나 1990년대 접어들면서 ASEAN 경제는 새로운 국제경제환경에 직면하게 되자,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음.
 - 1990년에 들어서면서 필리핀의 ASEAN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안, 인도네시아의 PTA 활성화를 위한 공동유효특혜관세 구상, 싱가포르의 성장삼각지대 등 ASEAN 국가들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어 AFTA 형성의 분위기가 성숙됨.
- 이에 따라 1991년 6월 태국의 아난 총리가 10년 이내에 ASEAN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해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AFTA 창설이 공론화되기 시작함.
 - 이에 대해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적극적으로 지지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통한 자유무역지대 형

성을 주장하였음.

- 회원국간 이견 때문에 1991년 10월 팔라렘푸르에서 개최된 제23차 ASEAN 경제장관회의(AEM)에서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대한 태국측 제안을 수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합의하였음.
 - 관세인하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자유무역지대의 추진수단으로서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공동유효특혜관세를 받아들임.
-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 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AFTA 설립을 합의함.
 - 「싱가포르선언(Singapore Declaration of 1992)」을 채택하고, 「ASEAN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Enhancing ASEAN Economic Cooperation)」에 서명함.
 -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공동유효특혜관세협정(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 for ASEAN Free Trade Area, 이하 CEPT 협정)」과 「AFTA협정」이 정식 조인됨.
-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1992년 4월 팔라렘푸르에서 개최된 고위각료회의(SEOM)에서 역내 관세인하 프로그램에 대한 초안이 작성됨.
 - AFTA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AFTA 평의회(AFTA Council)가 동년 12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어 CEPT시행절차(Procedures for CEPT), CEPT 원산지 규정(Rules and Origin for CEPT), AFTA 창설을 위한 CEPT협정의 해설(interpretative note) 등 3개 협정이 작성됨.
 - ASEAN 각국은 관세인하대상 공산품과 예외품목의 잠정리스트 그리고 관세삭감 스케줄을 제출하였음.
- 이에 따라 1993년 1월부터 AFTA가 정식 개시하게 되었는데, ITWG(CEPT 계획에 대한 임시작업반)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어 가

맹국은 1993년 7월 말까지 적용품목목록의 확인작업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품목리스트를 제출·교환함.

- 동년 10월 제25차 경제장관회담회의에서 CEPT 적용품목목록을 확인, 11월부터 CEPT 관세인하를 개시함.

□ 그동안 ASEAN 각국은 관세인하시기의 단축문제와 예외품목의 축소, AFTA 대상국가의 확대문제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해 왔음.

- 1994년 9월 泰國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26차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는 A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역내무역에 대한 관세인하 완료시기를 단축할 것에 합의함.
- 특히 관세인하 완료시기를 종전의 CEPT협정 발효 후 15년(2008년)에서 10년(2003년)으로 5년간 단축기로 합의한 바 있음.⁹⁾

2) 추진현황

□ 동아시아 유일한 지역협력체로서 ASEAN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역내 경제통합을 적극 추진해 왔고,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베트남,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 국가들을 신규회원국으로 가입시켜 'ASEAN 10' 실현하였음.

- 특히 AFTA 조기실현을 추진하면서 AIA, ASEAN 지적소유권 협력협정, 규격 및 표준의 상호인증협정, ASEAN 관세협정 등 소위 'AFTA 플러스' 정책을 통해 동남아 시장통합을 적극 추진해 왔음 (표 35 참고).

□ ASEAN의 지역통합정책의 핵심은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인하계획을 중심으로 한 무역자유화조치로서 역내 관세철폐를 목표로

9) 그 이후 금융위기를 맞아 지역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는 ASEAN은 1998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5차 정상회담에서 다시 시기를 1년 앞당겨 기존 회원국 ASEAN 6에 한해 2002년까지 조기 추진기로 함.

AFTA가 추진되고 있음.

- 산업협력을 위한 한정적인 관세인하조치로서 ASEAN 산업협력계획(ASEAN Industrial Cooperation: AICO)가 실시되어 왔음.
- 또한 투자자유화조치로서 ASEAN 투자지대(ASEAN Investment Area: AIA)가 실행단계에 있음.
- 그외에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한 무역원활화 조치, 지적재산권 보호, 규격·표준의 상호인증, 관세협정, 정책협조 등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와 같은 AFTA 기반 확대노력은 중국경제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아의 단일시장 통합노력으로서 FDI 유치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

〈표 35〉 ASEAN의 경제협력 프로그램(AFTA 플러스) 추진현황

협력내용	프로그램	대상	특징	비고
무역자유화	AFTA (1993년 개시)	포괄적 자유화 (원칙적으로 전제품)	단계적 관세 인하(CEPT)	CEPT 적용품목 이행후 관세인하: →20%→5%→ 0%, 2010/2015년 완료
			비관세장벽 철폐	수량규제의 철폐 등
	AICO (1996년 개시)	한정적 관세 인하 (제조업부품 및 자재)	즉시관세 인하	관세 0~5%
투자자유화	AIA (1998년 개시)	전업종 대상	내국인 우대조치 자본 및 노동이동 자유화	
서비스자유화	AFAS (1995년 개시)	서비스 분야	공통하위분야, ASEAN-X 방식, 3차 협상 중	
기타 원활화 조치	지적소유권 보호	지적소유권 보호, 공통 상표제도 확립		
	규격·표준의 상호인증	국제규격·기준 적용, 시험·증명기관의 정비, 정보교환, 인재육성		
	관세협정	관세분류, 통관수속, 관세평가의 통일·간소화		
	경제정책의 협조	거시경제정책에 관한 정보교환, 재정정책·규칙의 투명성 향상, 금융부문의 인재육성 등		
정보격차 완화	E-ASEAN (2000년 개시)	정보·통신	IT관련 정책 및 규제완화, 인적자원 공동 개발,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자료: 권을 외(2003),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p.36 참고.

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것임.

- 따라서 ASEAN+3 정상회의 추진과 병행하여 그동안 AFTA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시장통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

□ ASEAN의 경제통합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인하계획을 중심으로 한 무역자유화 조치로서 역내 관세철폐를 목표로 AFTA가 추진되고 있음.
- 둘째, 산업협력을 위한 한정적인 관세인하조치로서 ASEAN 산업협력계획(ASEAN Industrial Cooperation: AICO)이 실시되어 왔음.
- 셋째, 투자자유화조치로서 ASEAN투자지대(ASEAN Investment Area: AIA)가 실행단계에 있음.
- 그 외에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한 무역원활화 조치, 지적재산권 보호, 규격·표준의 상호인증, 관세협정, 정책협조 등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러한 경제통합 프로그램은 중국경제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아의 단일시장 통합노력으로서 FDI 유치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것임.

-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소 진통이 예상되고,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관세인하계획은 물론 비관세장벽 철폐 등 역내국간 상호 마찰요인이 높아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또한 AFTA는 회원국간 경제력차이가 크고,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현 단계에서는 무역창출효과보다는 부품산업 관련에서 무역전환효과가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역내 교역 확대보다는 외국인투자 여건의 개선을 통해 외국자본 유치를 확대하려는 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ASEAN은 AFTA를 기반으로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AICO, AIA, ASEAN 지적소유권 협력협정, 규격 및 표준의 상호인증협정, ASEAN 관세협정, E-ASEAN 구축 등 다양한 경제통합노력을 본격화함으로써 통합된 단일시장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2003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ASEAN 정상회담에서는 2020년을 목표로 ASEAN 공동체(ASEAN Community) 달성을 위한 「ASEAN 협력선언 II (Declaration of ASEAN Concord II, 이하 발리협약 II)」에 합의하여 ASEAN 경제통합의 심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음.

나. FTA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1) 경제성장

- AFTA가 ASEAN 회원국에 미칠 경제적 효과는 현재 관세인하가 추진 중이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큰 경제적 변화를 겪어 시계열상의 단순비교는 큰 의미가 없음.
- 따라서 CGE 모델을 통한 계량분석을 토대로 AFTA 추진시 거시경제적 효과는 <표 36>에 정리되어 있음.
- A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관세인하계획(CEPT)의 실현, 즉 역내 관세철폐 100%를 가정으로 ASEAN 6개국의 실질 GDP, 민간소득, GDP 디플레이터,¹⁰⁾ 수출, 그리고 수입에 미칠 효과를 분석하였음.
- AFTA가 완료되어 ASEAN 6개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ASEAN의 실질 GDP는 0.34%, 민간소득은 0.40% 증가하며, 총수출과 총수입은 각각 0.95%와 0.93% 증가함.
- 후생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추정된 AFTA의 민간소득증대효

〈표 36〉 A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ASEAN 6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실질 GDP	초기균형값 (10억 달러)	622	205	96	75	76	150	19
	초기균형값대비 증감률 (%)	0.34	0.18	0.58	0.42	0.05	0.47	0.76
민간소득	초기균형값 (10억 달러)	604	206	96	70	72	141	18
	초기균형값대비 증감률 (%)	0.40	0.21	1.04	0.36	0.28	0.28	0.73
수출	초기균형값 (10억 달러)	408	57	97	42	132	72	9
	초기균형값대비 증감률 (%)	0.95	0.64	1.61	1.60	0.11	1.14	3.50
수입	초기균형값 (10억 달러)	415	57	88	54	135	69	12
	초기균형값대비 증감률 (%)	0.93	0.64	1.78	1.24	0.11	1.18	2.63
GDP 디플레이터	초기균형값 (지수)	1.05	1.02	1.11	1.04	1.05	1.06	1.12
	초기균형값대비 증감률 (%)	0.07	0.03	0.49	-0.07	0.22	-0.19	-0.02

자료: 초기 균형값은 관세인하가 없었을 경우의 기준 균형 값(1997년)임.

10) 본 절에서 물가지표로서 수입가격 대신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한 이유는 자유무역 지대형성의 경우 수입물가의 하락으로 전반적인 물가의 하락을 예상할 수 있으나 부존자원의 완전고용을 가정한 본 모형의 특성상 자유무역에 따른 생산 및 소득의 증가는 생산요소의 가격상승과 국내생산비용의 상승을 유발하고, 이에 따른 수출가격 및 국내소비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므로 관세인하에 따른 중간재 및 최종재 수입의 가격하락효과를 상쇄하여 전반적인 물가상승 또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별 관세율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데 본 모형에서 관세인하의 효과를 반영하지 않는 서비스부문에서의 가격상승효과에 따른 물가상승이 예상된다. 또한 농림 수산업이나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일반 제조업부문의 경우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가격의 물가하락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 오히려 생산요소의 가격상승과 소득효과에 따른 가격상승효과를 고려 할 때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그 총체적인 물가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수입가격지표 대신에 GDP 디플레이터를 평균적인 거시물가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과는 인도네시아의 0.21% 증가에서 말레이시아의 1.04% 증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ASEAN 역내 무역비중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¹¹⁾ AFTA로 인한 수입물가하락에 따른 물가하락은 요소가격상승과 소득효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상쇄되어 전체적인 물가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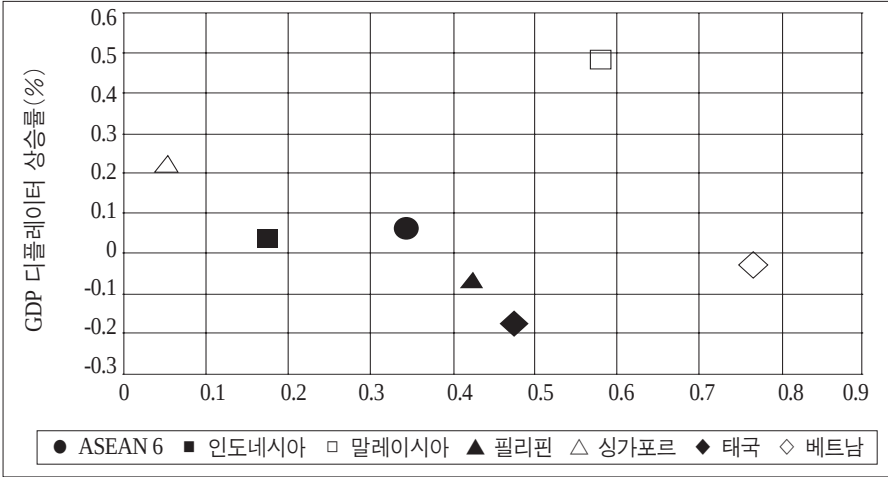
□ 국별로는 AFTA 이전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장벽¹²⁾을 갖고 있으며, 역내 교역규모가 큰 태국, 베트남의 경우 수입가격의 하락에 따른 물가하락효과가 커서 전체적인 물가수준의 하락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실질 GDP의 상승폭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큰 폭의 가격변화와 소득효과로 이 국가들에 대한 AFTA의 수출입 유발효과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필리핀의 경우는 태국과 유사한 역내 무역비중을 갖고 있어 그 거시 총량변수에 미치는 효과 역시 태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ASEAN 역내 교역비중이 낮은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ASEAN 역내 교역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완전고용이 이루어지고, AFTA 이전 관세율이 낮은 말레이시아의 경우 실질 GDP, 민간소득, 수출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른 물가상승압력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이미 무관세 국가이므로 AFTA로 인한 수입가격의 변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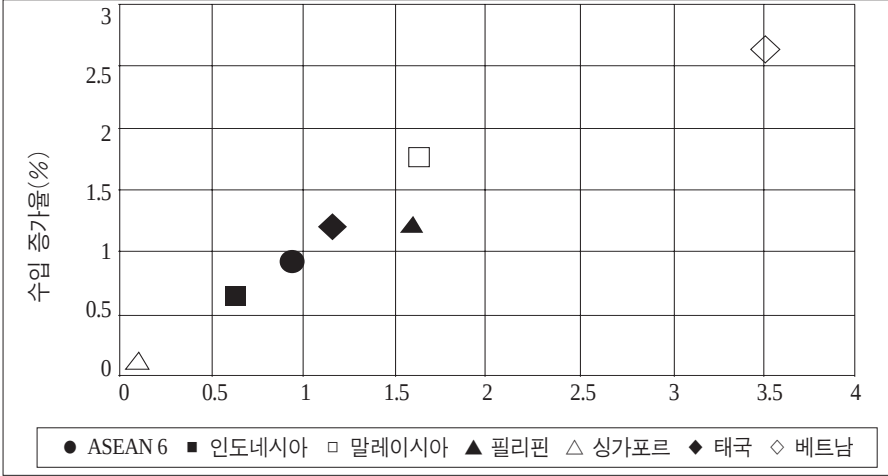
11) 본 모형의 초기 균형값 기준 역내 무역비중은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9.7%), 말레이시아(23.8%), 필리핀(11.4%), 싱가포르(20.8%), 태국(15.0%), 베트남(16.6%).

12) 모형 추정시 가정된 평균관세율은 인도네시아(6.87%), 말레이시아(5.53%), 필리핀(5.29%), 싱가포르(0.17%), 태국(11.47%), 베트남(16.52%)임.

〈그림 4〉 AFTA의 국별 거시경제효과



〈그림 5〉 AFTA의 국별 수출입효과



2) 무역

□ AFTA로 인한 ASEAN 역내 국가간 무역수지의 변동을 살펴보면 〈표 37〉에서 보듯이 ASEAN 역내 무역비중이 낮은 인도네시아와 무관세 국가인 싱가포르의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됨.

- 반면에 역내 무역비중이 ASEAN 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높은 말레이시아나 관세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태국, 베트남의 역내 무역수지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필리핀의 경우는 그 주요 수입 산업인 기계 및 제조업부문의 관세율 철폐로 인한 수입증대로 무역수지 악화가 예상됨.
- 국별로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싱가포르와 태국을 제외하고는 전체 ASEAN 국가와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말레이시아의 경우 대싱가포르 무역흑자 폭이 889백만 달러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872백만 달러의 무역수지흑자의 감소가 예상되나 여타 ASEAN 국가와의 무역에서는 소폭이나마 흑자 폭의 상승이 예상됨.
 - 필리핀의 경우는 전체 ASEAN 국가대비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대될

〈표 37〉 AFTA의 역내 무역수지에 대한 효과

(단위: 100만 달러)

	ASEAN 6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ASEAN 6		1,048	-2,402	2,264	741	-3,138	1,487
		[-79]	[872]	[349]	[-1,822]	[413]	[267]
인도네시아	-1,048		197	323	-1,643	-178	253
	[79]		[80]	[60]	[-162]	[67]	[34]
말레이시아	2,402	-197		279	2,145	19	156
	[-872]	[-80]		[55]	[-889]	[33]	[9]
필리핀	-2,264	-323	-279		-1,175	-264	-223
	[-349]	[-60]	[-55]		[-152]	[-9]	[-73]
싱가포르	-741	1,643	-2,145	1,175		-2,266	852
	[1,822]	[162]	[889]	[152]		[436]	[183]
태국	3,138	178	-19	264	2,266		449
	[-413]	[-67]	[-33]	[9]	[-436]		[114]
베트남	-1,487	-253	-156	223	-852	-449	
	[-267]	[-34]	[-9]	[73]	[-183]	[-114]	

자료: [] 안은 초기 균형값대비 증감액임.

것으로 예상되며, 싱가포르를 전체 ASEAN 국가대비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감소할(1,822백만 달러) 것으로 전망됨.

- 태국의 경우는 대필리핀 및 대베트남 흑자 폭이 증가할 것이나 전체적으로는 413백만 달러 정도의 흑자 폭 감소가 예상되고 베트남의 경우는 대필리핀 흑자 폭의 증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대 ASEAN 무역수지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음.
- 이는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의 크기와 역내 무역비중의 크기에 의해 무역수지가 영향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3) 투자

- ASEAN 국가들은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을 통해 1980년대 후반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무역을 촉진하고 성장의 엔진으로 작용하면서 직접투자 증가 수출증대 경제성장률 증가라는 메커니즘을 유지
 - 이러한 직접투자와 수출의 선순환은 AFTA의 주요 목적이었고, ASEAN 국가들은 그동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ASEAN의 경제발전과 공업화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임.
 - 기술과 경영자원이 부족한 동남아 각국은 수입대체공업화 시기에 도 외자 유치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1980년대 말 인도차이나 국가들이 개혁·개방체제로 전환하면서 투자여건이 급격히 개선됨에 따라 ASEAN은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급속히 부상하였고, 외국인 투자자본이 역내로 대거 유입하게 되었음.
- 실제로 동남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1985~90년 중 연평균 약 61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0~95년 중에는 160억 달러 규모로 급증
 - 외환위기 직전이 1997년에는 300억 달러 규모로 급증한 바 있으나, 중국이 천안문사태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개혁·개방정책을 가속화

〈표 38〉 ASEAN+3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

(단위: 100만 달러)

	1990~95 (연평균)	1997	1998	1999	2000	2001
싱가포르	5,782	10,746	6,389	11,803	5,407	8,609
태 국	1,222	3,626	5,143	3,561	2,813	3,759
말레이시아	4,655	6,324	2,714	3,895	3,788	554
인도네시아	2,135	4,677	-356	-2,745	-4,550	-3,277
필 리 핀	1,028	1,249	1,752	578	1,241	1,792
브루나이	102	702	573	596	600	244
베 트 남	947	2,587	1,700	1,484	1,289	1,300
라 오 스	33	86	45	52	34	24
미 얀 마	180	387	314	253	255	123
캄보디아	80	-15	230	214	179	113
ASEAN합계	16,164	30,369	18,504	19,691	11,056	13,241
중 국	19,360	44,237	43,751	40,319	40,772	46,846
일 본	1,144	3,224	3,193	12,741	8,322	6,202
한 국	978	2,844	5,412	9,333	9,283	3,198

자료: UNCTAD(2002), *World Investment Report 2002*.

하면서 아시아로 향한 외국인직접투자를 대거 흡수하자, 1990년대 중반 이후 ASEAN으로의 직접투자 유입이 큰 영향을 받기 시작함.

- 중국은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의 추진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치 등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WTO 가입 이후 수출촉진과 함께 외국인직접투자 유인이 지속적으로 증대
 - 중국이 매년 400억 달러 규모 이상의 대규모 FDI를 유치하여 AFTA 추진에 의한 투자유치효과는 크게 약화

4) 기타 - 금융위기 이후 대응과정

- 1997년 태국에서 촉발된 외환위기가 역내 국가들로 파급되면서 관세 인하계획이 상당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ASEAN은 관세인하시기를 앞당기고 무역자유화는 물론, 투자, 서비스, 금융, 재정협력, 정보격차 완화 등 경제통합수준도 보다 심화시키고 있음.
 - 이는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동남아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통합을 통한 무역 및 투자유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1998년 12월 ASEAN 정상회의에서 역내 관세를 5%로 낮추는 CEPT 실행일정을 2003년에서 2002년으로 앞당긴 바 있고,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Hanoi Action Plan)을 채택한 바 있음.¹³⁾
 - 또한 1999년 11월 필리핀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ASEAN 비공식 정상회의에서는 기존 6개 회원국은 최종적으로 2010년까지, 후발가입국은 2018년에서 2015년까지 앞당겨 역내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2003년 현재 기존 6개국에서 관세인하 적용품목은 총 4만 9,445개가 설정되어 5% 이하의 관세인하 실행률은 98.9%에 이르고 있고, 5% 초과인 관세인하 대상 품목비중은 1.1%에 불과함.
 - 국별 관세인하 실행률은 싱가포르와 태국 100%, 필리핀 99.54%, 인도네시아 98.83%, 말레이시아 97.32%, 브루나이 96.71% 순임.
 - 한편 후발가입국인 베트남은 94.89%를 관세인하계획에 적용시켜

13)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ASEAN 정상들은 1997년 팔라렘푸르에서 개최된 제2차 비공식 ASEAN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ASEAN Vision 2020의 실천프로그램으로서 하노이 실행계획(Hanoi Action Plan)에 합의하였다.

5% 이하로 관세를 낮추었으며, 라오스와 미얀마는 각각 71.39%, 76.43%이나 캄보디아는 아직 45.66%에 불과한 실정임(표 39 참고).

- 그러나 AFTA 출범으로 회원국간 분업이 촉진됨에 따라 ASEAN 각국 간의 산업재배치는 역내 관세인하와 맞물리면서 각국의 경쟁우위에 입각한 무역흐름의 재편에 의해 추진될 것으로 보여 현재 산업발전 단계의 큰 격차가 경제통합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잠정배제품목 설정과 관련하여 회원국간에 마찰과 갈등이 표면화되고,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관세인하계획은 물론 비관세장벽 철폐 등 역내국간 상호 마찰요인이 높아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ASEAN 국가들이 추진해 온 자유무역지대 결성을 위한 관세인하계획은 비교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

〈표 39〉 ASEAN 회원국의 CEPT 관세인하품목(2003년)

	관세인하품목					비율				
	IL	TEL	GEL	SL/HSL	계	IL	TEL	GEL	SL/HSL	계
브루나이	6,337	-	155	-	6,492	96.71	-	2.39	-	100
인도네시아	7,444	-	77	11	7,532	98.83	-	1.02	0.15	100
말레이시아	10,116	218	53	8	10,395	97.32	2.10	0.51	0.80	100
필리핀	5,632	-	16	10	5,658	99.54	-	0.28	0.18	100
싱가포르	10,705	-	-	-	10,705	100.00	-	-	-	100
태국	9,211	-	-	-	9,211	100.00	-	-	-	100
ASEAN 6	49,445	218	301	29	49,993	98.90	0.44	0.60	0.06	100
캄보디아	3,115	3,523	134	50	6,822	45.66	51.64	1.96	1.96	100
라오스	2,535	864	74	78	3,551	71.39	24.33	2.08	2.20	100
미얀마	4,182	1,224	48	18	5,472	76.43	22.37	0.88	0.33	100
베트남	10,143	41	416	89	10,689	94.89	0.38	3.89	0.83	100
CLMV	19,975	5,652	672	235	26,534	75.28	21.30	2.53	0.89	100
ASEAN 합계	69,420	5,870	973	264	76,527	90.71	7.67	1.27	0.34	100

자료: ASEAN 사무국

〈표 40〉 ASEAN 회원국의 역내 관세율 인하추이(1998~2003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싱가포르	0.00	0.00	0.00	0.00	0.00	0.00
태 국	10.56	9.75	7.40	7.36	6.02	4.64
브루나이	1.35	1.29	1.00	0.97	0.94	0.87
인도네시아	7.04	5.85	4.97	4.63	4.20	3.71
말레이시아	3.58	3.17	2.73	2.54	2.38	2.06
필 리 핀	7.96	7.00	5.59	5.07	4.80	3.75
베 트 남	6.06	3.78	3.30	2.90	2.89	2.02
미 얀 마	4.47	4.45	4.38	3.32	3.31	3.19
라 오 스	5.00	5.00	5.00	5.00	5.00	5.00
ASEAN	5.37	4.77	3.87	3.65	3.25	2.68

자료: ASEAN 사무국

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무엇보다도 〈표 40〉에서 나타나듯이 ASEAN 회원국의 역내 관세율은 2003년 현재 2.68% 수준으로서 1998년 5.37%에 비교하여 절반 이하로 낮아졌음.
- 기존 회원국 중에서 태국의 역내 관세율이 4.64%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1998년 10.56%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낮아졌고, 필리핀도 7.96%에서 3.75%로 3.21%p가 낮아졌음.

□ 더욱이 관세·비관세장벽 철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역원활화 조치를 포함하는 ‘AFTA 플러스’ 정책을 통해 경제통합을 진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불필요한 기술적 무역장벽의 철폐, 기준사항에 대한 일치 및 조화, 그리고 관세 절차의 간소화 및 통일성과 같은 무역 활성화를 위한 조치사항들에 있어서 많은 가시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음.

다. 요약 및 시사점

- A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하면 AFTA로 ASEAN 회원국이 기대할 수 있는 무역창출효과나 생산유발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체제전환국이고 그 경제개발 정도가 가장 낮은 베트남의 경우 AFTA로 상당한 수준의 무역창출효과와 생산유발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임.
 - 또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의 경우도 무역창출효과나 생산유발효과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AFTA로 역내 국가와의 무역수지에 있어 상당한 개선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AFTA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는 ASEAN 회원국간 역내 무역비중이 20% 내외로 자유무역의 이득을 극대화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임.
 - 또한 ASEAN 회원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를 비교해 볼 때 상호 보완적이기보다는 상호 경쟁적이며,
 - ASEAN 각국의 역외 수출시장(일본 및 미국)에서의 경쟁도 치열하여 자유무역에 따른 비교우위와 이에 따른 효율성 제고가 쉽지 않으며, ASEAN 국가간의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로 포괄적인 무역장벽의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이처럼 AFTA의 경제적 성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ASEAN 회원국간 자유무역지대 형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임.
 - ▲ 첫째, AFTA는 무역자유화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ASEAN 회원국들이 능동적으로 준비한 통상정책에서의 공조라기보다는 1980~90년대 초반 범세계적으로 발생한 배타적 지역주의에¹⁴⁾ 대

응하여 ASEAN 회원국들이 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한 수동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하나였다는 점임.

- 즉 AFTA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ASEAN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통상정책방안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결국 AFTA는 ASEAN 경제협력의 필요조건이었지 충분조건은 아니었다는 것을 시사함.

▲ 둘째, AFTA의 정태적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AFTA로 인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가,¹⁵⁾ 단일시장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그 성장잠재력, 그리고 경쟁심화에 따른 효율성의 제고 등 동태적 이득은 지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ASEAN 회원국의 경제발전이 막대한 규모의 FDI 유입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AFTA로 인해 창출되는 외자유치는 중국의 등장으로 그 경쟁력을 잃고 있는 ASEAN의 입장에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셋째, ASEAN이 AFTA를 중심으로 역외국가와의 협상에서 하나의 단일경제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협상력의 제고 역시 AFTA의 긍정적인 효과라 판단됨.

- 최근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ASEAN+3 협력체제를 고려할 때 ASEAN 회원국이 자유무역의 이득을 보다 많이 수혜받기 위해서는 협상력의 제고나 선발주자로서의 경험축적 역시 중요한 경제외적

14) EU(유럽공동체) 및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 형성 등

15) 1994년 AFTA 출범 전후기간과 1997년 외환위기기간을 포함하는 1990년대 대 ASEAN FDI 증가율을 같은 기간 대중국 FDI 증가율과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으며, AFTA 출범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 대ASEAN FDI 증가율의 괄목할 만한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대ASEAN FDI의 증가추세는 최근 들어 다시 활발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DI 증가율비교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ASEAN	10.2	-9.7	31.6	26.5	17.7	13.4	6.3	-30.2	8.3	-49.3	91.2	42.0
중국	25.2	155.5	146.6	22.8	6.1	12.1	10.1	-1.1	-11.4	-0.9	36.3	12.5

자료: ADB, Key Economic Indicators, 각 년도.
ADB(2003),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3.

이득임에 분명함.

- 상기 논의한 AFTA의 동태적 효과나 경제외적 효과를 고려할 때 AFTA의 정태적 성과만을 실증 분석한 기존의 연구결과로 AFTA의 성패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으로 판단됨.

□ 앞서서도 강조하였듯이 AFTA가 ASEAN 경제협력의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이었다면 그 충분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개선책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첫째,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제한된 규모의 ASEAN 역내 무역 비중으로 자유무역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AFTA의 동태적 이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FDI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투자자유화조치 및 투자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즉 이제는 관세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자유화에서 투자자유화로 그 무게중심을 옮겨가야 할 것이며, 더불어 무역원활화와 같은 비관세장벽의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명실상부한 ASEAN 단일경제권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 둘째, 상호 경쟁적인 산업 및 무역구조를 갖고 있는 ASEAN 회원국 간의 무역자유화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인 산업 및 무역구조를 갖고 있는 동북아와 ASEAN+3 차원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물론 ASEAN의 체제전환국들이 AFTA에 참여함으로써 보완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 체제전환국들의 경제발전 정도가 기존의 ASEAN 회원국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단기간에 이들의 참여가 AFTA의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AFTA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로의 확대가 요구됨.

6.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가. 요르단·미국 FTA

1)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 미·요르단 FTA는 2000년 10월에 체결되어 2001년 12월부터 발효되었는데, 이로써 요르단은 쏘 세계에서 네 번째로, 아랍국가 중 첫 번째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되었음.
- 미국이 요르단이라는 중동의 경제소국과 FTA를 체결하고 그것도 협상 개시 4개월 만에 신속히 협정을 체결한 것은 미·요르단 FTA가 경제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훨씬 크다는 것을 시사함.
 - FTA 체결 당시 요르단의 GDP 규모는 약 84억 달러로 미국의 0.1%에도 못미쳤고, 미·요르단의 연간 교역규모는 약 4억 달러로 미·멕시코간의 1일 교역규모와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요르단과 FTA를 체결한 것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간의 분쟁을 완화하고 아랍국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임.
 - 한편 1994년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평화협정과 지난 10년간 요르단의 경제개혁과 개방노력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보상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
- 양국간 FTA의 핵심적 내용은 양국간의 거의 모든 상품거래와 서비스교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제거하기로 한 것임.

2) FTA협정을 전후한 경제성과 분석

가) 경제성장

-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 요르단의 경제성장률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동의 비산유국가 중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요르단의 경제성장률은 2001년 4.2%, 2002년 4.9%를 기록했는데 두 해가 세계 전체적으로 경기침체기이며 개도국 전체의 경제성장률도 2000년에 비해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요르단의 경제성장은 높은 수준임.
-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요르단은 중동 전체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FTA가 발효된 2001년부터는 역전되었으며, 비산유국인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등의 주변국과 비교해도 대단히 양호한 것임.

나) 무역

-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 요르단의 전체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

〈표 41〉 중동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개도국	6.1	6.6	5.9	3.5	3.9	5.7	4.1	4.6
중동지역*	4.0	5.3	6.1	3.7	0.9	6.0	2.0	4.8
요르단	6.2	2.1	3.3	3.0	3.1	4.2	4.2	4.9
이집트	4.5	4.9	5.9	4.5	6.3	5.1	3.5	2.0
레바논	6.5	4.0	4.0	3.0	1.0	-0.5	2.0	2.0
시리아	7.5	4.7	4.1	6.3	-0.9	0.6	7.2	2.7

주: * 터키를 포함한 16개국

자료: IMF(Sept. 2003), *World Economic Outlook*.

〈표 42〉 요르단의 무역 추이

(단위: 100만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 출	1,801.8 (-1.8%)	1,831.3 (1.6%)	1,898.7 (3.7%)	2,293.6 (20.8%)	2,729.9 (19.0%)	2956.5 (8.3%)
수 입	3,824.5 (-6.7%)	3,697.7 (-3.3%)	4,575.7 (23.7%)	4,831.4 (5.6%)	4,947.0 (3.0%)	5498.8 (11.1%)
무역수지	-2,022.6	-1,866.4	-2,677.0	-2,537.7	-2,217.2	-2,542.3

자료: Central Bank of Jordan(Feb. 2004), *Monthly Statistical Bulletin*.

는데, 2001년, 2002년, 2003년에 각각 20.8%, 19.0%, 8.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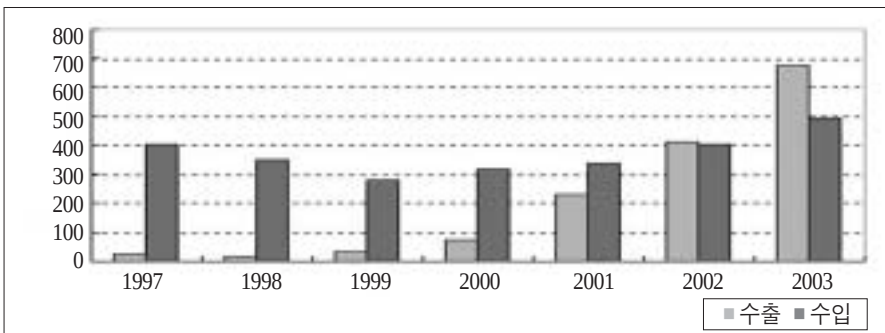
- 같은 기간 동안 수입의 증가율은 높지 않았는데, 단지 2003년에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였음.

□ 양국간 FTA 체결 이후 2000~03년의 3년간 요르단의 對美 수출은 900% 이상 급증하였고 對美 수입은 55% 증가하여 양국간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였음.

- 요르단의 대미 수출액은 2000년 7,300만 달러에서 2003년 6.7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대미 수입액은 같은 기간 동안 3.9억 달러에서 4.2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그림 6〉 요르단의 對美상품 수출입 추이

(단위: 100만 달러)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04), *Foreign Trade Statistics (homepage)*.

〈표 43〉 요르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액

(단위: 100만 달러)

연도	1991~96 평균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외국인 직접투자	4	361	310	158	787	100	56

자료: UNCTD,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 그 결과 미국은 1999년까지 요르단의 10대 수출국에도 들지 못했지만 2003년에는 최대 수출 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요르단의 대미 무역수지는 2000년 2.4억 달러 적자에서 2003년 1.8억 달러 흑자로 전환되었음.

다) 투자

- 미국과의 FTA 체결이 요르단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영향을 분석하기는 아직 이르며, 체결 직후에는 외국인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9.11 테러 이후 고조된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라) 기타

- 요르단의 미국과의 FTA 체결로 국내산업구조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광산물의 수출에 주로 의존했던 데서 점차 섬유와 의류의 노동집약적 경공업 분야의 비중이 증가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음.
 - 대미 수출 중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인 부문은 섬유 및 의복산업인데, 1999년에 약 2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이 품목의 수출액은 2003년에 6.1억 달러로 4년 사이에 300배 이상 증가하였음.
 - 그 결과 전체 수출에서 의류가 차지하는 비율도 1999년 7%에서 2003년에는 95%로 전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음.

3) 요약 및 시사점

- 미·요르단 FTA는 경제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강하게 띠고 있고, 요르단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보상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음.
- 그 결과 요르단은 FTA 체결을 통해 큰 경제적 혜택을 입었는데, 경제성장률이 상승하였고 對美수출은 9배 이상 증가하여 미국이 요르단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
- 양국간 FTA는 요르단의 경제상황 개선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르단이 중동의 비산유국가 중 가장 개방적이고 유망한 경제라는 인식을 심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1)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 GCC의 출범
 -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같은 주변 정세변화는 걸프만 아랍국가들의 안보위협을 가중시켜 동 지역 국가들의 공동안보협력문제를 촉발시켰음.
 -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및 오만 등 6개국은 걸프만 아랍국들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1981년 5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정상회담에서 GCC를 결성함.
- GCC 경제통합협정의 출범
 - GCC 국가들은 국가간 개발수준 및 산업구조의 차이, 경제정책의

이질성, 인프라부문의 미비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경제협력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GCC를 안보협력기구의 차원을 넘어선 경제협력기구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82년 11월 제3차 정상회담에서 경제통합협정을 조인함.

- 1983년 3월부터는 역내의 관세장벽 철폐, 여행제한의 해제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GCC 회원국간의 교역에서 농산물, 축산물, 공산품, 천연자원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고 있음.
- 2003년 1월부터는 “GCC 국가간 관세동맹실현” 방안의 일환으로 GCC 회원국들의 역외 관세를 5%로 단일화하기로 했는데, 다만 국가간 관세수입 배분, 자국제품 보호관세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3년간의 완충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완전 시행할 예정임.
- GCC는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중간단계로 GCC국가간 관세동맹(2006년), 단일통화 도입(2010년)을 계획하고 있음.

□ 관세동맹 추진의 배경과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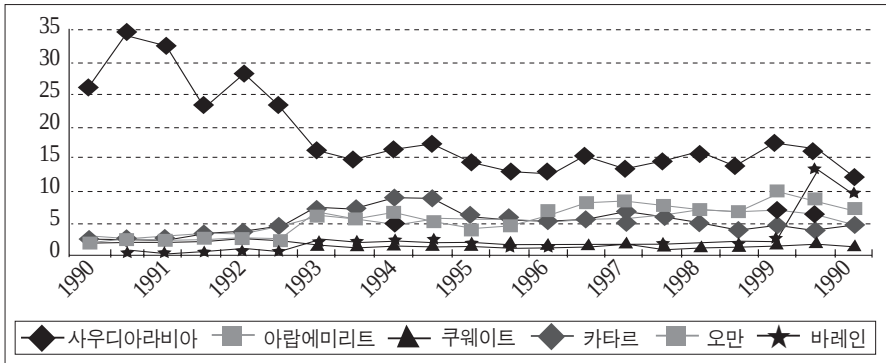
- GCC 관세단일화는 GCC·EU간의 FTA 합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EU 측이 줄곧 요구해 왔음
- 걸프공동시장 결성과 경제통합의 실현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역외무역에 대한 관세를 단일화하고 관세연합을 발족시키는 것이 선결과제임.
- GCC 역내 협력 강화는 단순히 내부분제가 아니라 WTO체제하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절실한 현안이 되었음.
- 걸프공동시장이 결성되면 연간 상품수입규모가 700억 달러를 넘는 거대시장이 창출되고, 역사상 최대의 석유생산 블록이 탄생하게 됨.

2) FTA 체결을 전후한 성과 분석

가) 경제성장

〈그림 7〉 GCC 역내 수출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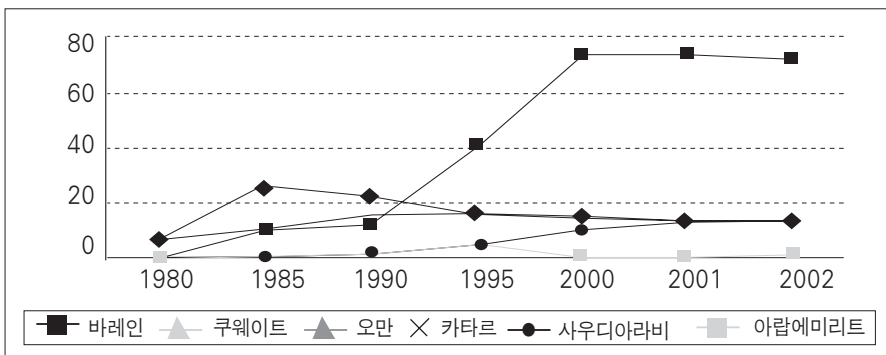
- GCC 국가의 경우 석유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고 국제유가가 경제성장률을 거의 좌우하기 때문에 FTA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추출하기 어려움.

- 역내 관세가 철폐된 1983년 이후는 국제유가의 급락기와 일치하여 GCC 국가가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한 시기임.

- 전체 수출 중 석유·가스부문의 수출이 80~90%에 이르기 때문에 GCC 역내 FTA 체결로 인한 비석유부문의 수출증대가 있었다고 해도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은 극히 미미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 8〉 GCC 국가 GDP 대비 FDI Stock의 비중

(단위: %)



나) 무역

- GCC 국가간 역내 관세가 철폐된 1983년을 전후로 바레인을 제외한 5개국의 경우 전체 수출입 중 GCC 역내 수출입비중이 미약하나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다) 투자

- GCC 국가에 대한 FDI는 일반적으로 자원(석유, 천연가스 등)개발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대규모 투자자본을 필요로 하는 자원 개발의 특수성으로 인해 각 연도별 금액 변동이 심함.
- 역내 관세를 철폐한 1983년을 전후로 GDP 대비 FDI Stock의 비중이 다소 늘어나기는 했으나, 세계적인 FDI 증가추세를 감안시 그다지 두드러지지는 않음.
- GCC 역내국가간 FDI는 비록 소규모이기는 했으나,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서 타 역내국가로 이루어졌으며, 1980~85년간과 1991~94년간을 비교시 3배 가까이 증가해, 1994년경에는 6억 4천만 달러에 달하였음.
- UNCTAD에 따르면, 과거에는 GCC 국가가 FDI에 있어 역외국가를 역내국가와 차별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

3) 요약 및 시사점

- GCC 국가들은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언어적 동질성으로 인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 국가가 석유·가스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국가간 산업구조가 유사하여 FTA로 인한 상호 보완효과는 크지 않은 실정이며, ‘규모의 경제’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치적 유대관계와 대외교섭력의 강화 측면에서는 GCC 형성이 유리한 작용을 하고 있음.

7. 요약 및 결론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음.
 - WTO 회원국의 대부분이 FTA를 체결하였으며, 146개 회원국 중 몽골, 중국 등 극히 일부 국가만이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음.
 - 더구나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은 NAFTA에 이어 미 대륙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형성하려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경제이론은 FTA가 양국간의 무역 촉진,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역내외 국가로부터의 투자 활성화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등의 다양한 효과를 지닌다고 지적하고 있음.
 - 실제로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NAFTA, EU, MERCOSUR 등의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음.

가. NAFTA

- NAFTA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과 멕시코와 같은 개발도상국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며, NAFTA로 인한 가장 뚜렷한 효과는 역내교역의 확대임.
 - 미국과 캐나다의 NAFTA 역내 교역비중은 각각 1993년 27.8% 및 74.6%에서 2002년 32.1% 및 78.0%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멕시코는

연도별 변화가 있으나 1999년 역내 교역비중이 83%에 달하기도 하였음.

- 미국의 對멕시코 수출은 1993년 416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1,088억 달러로 162%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출비중도 1993년 8.9%에서 2002년 14.1%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한편 1980년 캐나다 총수출의 60%이던 對美 수출비중은 1993년에 80%를 넘어서 2002년에 87.7%를 기록하고, 수입비중은 1998년에 68.3%까지 상승했다가 2002년에 62.7%를 기록했음.
- 멕시코는 1993년 429억 달러였던 對미국 수출이 2002년 1430억 달러로 급증하였고, 對캐나다 수출은 금액으로는 크지 않으나 1993~2002년 사이에 75% 이상 증가하였음.

□ NAFTA 출범 이후 역내 투자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NAFTA 출범 이전에 미국 기업들의 對멕시코 직접투자 확대 및 국내투자 감소의 우려가 대두되었으나 실제로는 기우로 밝혀졌음.
- 캐나다의 對미국 투자는 NAFTA 출범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1993년 676.8억 캐나다 달러에서 1999년에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한 1,343억 캐나다 달러를 기록하였음.
- NAFTA 출범 이전에 연 40억 달러, 1989~93년 사이에 연평균 3.7% 증가에 그친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NAFTA협상이 시작된 1991년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발효 첫 해에는 150억 달러를 돌파했음.

□ 경제성장은 경제의 다양한 요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NAFTA의 체결로 인한 경제성장효과를 별도로 측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움. 그러나 NAFTA 출범 이후 역내 회원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멕시코는 NAFTA의 체결로 나타난 무역확대를 바탕으로 폐소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1995년 -6.2% 성장률에서 1996년 5.2%,

1997년 7.0%를 기록하였음.

나. EU

- EU는 1973년 이래 회원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04년 중동구 국가로의 확대를 목전에 두고 있음.
 - EU의 형성 및 확대로 역내 교역이 증가하고 투자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수많은 실증분석에서 확인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교역과 투자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연구결과가 상존하고 있음.
- 동유럽 국가의 경우, EU로의 편입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체제 전환국인 동유럽 국가의 국내총생산은 1990~95년 사이 연평균 1%씩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2002년까지 동유럽 국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6%에 달해 EU보다 더 높았음.
 - 동유럽 국가의 EU 가입 신청 이후 EU는 동유럽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 국가들의 EU 교역의존도는 50~75%에 달하고 있음.
- 1995년에서 2001년 사이에 동유럽의 신규 가입국에 대한 투자는 269% 증가하였음.
 - 국가별로 가장 많은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한 국가는 폴란드, 체크, 헝가리 등임.
 - 동유럽 신규 가입국로의 주요 투자국은 EU이며, 그 비중은 2/3에 달하고 있음.
- EU와 터키간 관세동맹의 경우 교역증대효과는 미미하지만 긴밀한

교역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며, EU보다는 터키가 관세동맹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음.

- 터키의 경우 1998년 경제위기를 겪을 당시 EU 외의 수출대상국에 대한 수출은 감소한 반면, EU에 대한 수출은 관세동맹으로 크게 감소하지 않아 경제위기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들이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었음.

- 1997년 터키의 전체수출 중 EU의 비중은 46.6%에서 1998년에는 50%, 1999년에는 53.9%로 감소하지 않았으며, 동 기간 동안 EU로부터의 수입비중도 안정적으로 51~52%를 유지하였음. 이에 반해 EU 외 비OECD 회원국에 대한 터키의 수출은 1997년 40.7%에서 1998년 37.1%, 1999년 29.2%로 감소하였음.

□ EU와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FTA는 2000년부터 발효되어, 현재 그 성과를 논의하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지만 무역 및 투자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FTA의 추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EU의 對남아프리카공화국 교역량은 FTA 체결 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투자 부문 또한 EU 전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있어,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무역·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거대시장인 EU와의 FTA의 추진을 통해 對EU 시장 진출을 점차 확대하고 있어, 거대시장과의 FTA 추진이 시장확대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EU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FTA 추진시 남아공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유화 추진 시기 및 자유화 품목 등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능력배양 고양을 위해 경제기술 협력 및 금융지원 그리고 정치적 대화 개최 등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였음.

- EU가 현재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TDCA협정을 추진한 이유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제 및 정치관계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개방속도 및 상품의 범위에 있어 EU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장개방을 추진하였으며, 게다가 EU로부터 다양한 경제·기술협력 및 금융지원까지 얻어내는 협상력을 발휘하였음.

다. MERCOSUR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출범 이후 개도국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어 왔음.
 - MERCOSUR는 초기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로 출범, 1995년 불완전한 형태지만 관세동맹(Customs Union)단계로 발전했으며, 2006년 공동시장(Common Market)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MERCOSUR는 출범 이후 역내 교역 확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급증 등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명실상부한 경제통합체로 자리매김했음.
- 경제통합의 심화는 기본적으로 회원국간 거시경제지표의 수렴화·동조화 현상으로 표출됨.
 - MERCOSUR의 경우 통합 초기 회원국간 거시경제지표의 동조화 현상은 비교적 미미했으나 회원국간 교역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동조화 현상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남.
- MERCOSUR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하여 1995년 관세동맹의 단계로 발전하는 가운데 이룩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역내교역의 증가였음.

- 이에 따라 1999년 브라질 경제위기로 역내 수출이 크게 감소하기 직전까지인 1990~98년 기간 MERCOSUR의 역내 수출이 393%나 증가한데 반해, 총수출은 75.2%, 역외수출은 44.2% 증가하는 데 그쳤음.
 - 이에 따라 1990년 MERCOSUR 출범 직전 8.9%에 불과했던 회원국의 역내 수출비중은 1998년에는 25%로 증가했음.
- 1990년대 남미지역의 경제적 안정 및 민영화 등 외국인투자 개방과 더불어 MERCOSUR가 경제통합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면서 1980년대 크게 주춤했던 외국인투자가 급증했음.
- 통합 이전 연평균 20억 달러에 불과했던 FDI 유입은 1995년 MERCOSUR가 관세동맹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크게 증가, 100억 달러 대로 급증했으며, 1999년에는 529억 달러로 최고점에 달했음.
- MERCOSUR 경제통합의 두드러진 성과 중의 하나는 대외협상력 제고임. 1995년 관세동맹형태로 발전하면서 MERCOSUR는 대외협상에서 공동의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음.
- 이에 따라 제고된 MERCOSUR의 대외협상력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협상과 EU와의 FTA협상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음.
 - 특히 MERCOSUR는 강화된 협상력을 바탕으로 WTO 등 다자협상 무대에서도 통합체의 이해 확대를 위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라. ASEAN

- A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AFTA로 ASEAN 회원국이 기대할 수 있는 무역창출효과나 생산유발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체제전환국이고 그 경제개발 정도가 가장 낮은 베트남의 경우

AFTA로 상당한 수준의 무역창출효과와 생산유발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의 경우도 무역창출효과나 생산유발효과가 의미있는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AFTA로 역내 국가와의 무역수지에 있어 상당한 개선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됨.

- A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는 ASEAN 회원국간 역내 무역비중이 20% 내외로 자유무역의 이득을 극대화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임.
- 이처럼 AFTA의 경제적 성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ASEAN 회원국간 자유무역지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다음의 같은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음.
 - 첫째, 1980~90년대 초반 범세계적으로 발생한 배타적 지역주의에 대응하여 ASEAN 회원국들이 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임.
 - 둘째, AFTA의 정태적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AFTA로 인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가, 단일시장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그 성장잠재력, 그리고 경쟁심화에 따른 효율성의 제고 등 동태적 이득은 지대할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AFTA 출범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 ASEAN 국가로의 FDI 증가율은 중국으로의 증가율을 앞질렀으며, 외환위기 이후 ASEAN 국가로의 FDI 증가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셋째, ASEAN이 AFTA를 중심으로 역외국가와의 협상에서 하나의 단일경제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협상력의 제고 역시 AFTA의 긍정적인 효과라 판단됨.

마.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 2000년 10월 체결되고 2001년 12월부터 발효된 미·요르단 FTA는 경제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강하게 띠고 있고, 요르단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보상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음.
- 요르단은 FTA 체결을 통해 큰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경제성장률이 상승하였고 對美 수출은 9배 이상 증가하여 미국이 요르단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
 - 요르단의 경제성장률은 2001년 4.2%, 2002년 4.9%를 기록했는데 두 해가 세계 전체적으로 경기침체기이며 개도국 전체의 경제성장률도 2000년에 비해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요르단의 경제성장은 높은 수준임.
 - 요르단의 대미 수출액은 2000년 7,300만 달러에서 2003년 6.7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대미 수입액은 같은 기간 동안 3.9억 달러에서 4.2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그 결과 미국은 1999년까지 요르단의 10대 수출국에도 들지 못했지만 2003년에는 최대 수출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요르단의 대미 무역수지는 2000년 2.4억 달러 적자에서 2003년 1.8억 달러 흑자로 전환되었음.
- 양국간 FTA는 요르단의 경제상황 개선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르단이 중동의 비산유국가 중 가장 개방적이고 유망한 경제라는 인식을 심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GCC를 안보협력기구의 차원을 넘어선 경제협력기구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형성된 것으로, 궁극적으로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중간단계로 GCC 국가간 관세동맹(2006년), 단일 통화 도입(2010년)을 계획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 국가가 석유·가스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국가간 산업구조가 유사하여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치적 유대관계와 대외교섭력의 강화 측면에서는 GCC 형성이 유리한 작용을 하고 있음.

바. 경제적 손실

- FTA 또는 무역자유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로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생산감소 및 자원의 이동에 따른 구조조정비용, 계층간 소득불균형의 확대 가능성을 들 수 있음.
 - FTA는 개별 국가 전체에는 이익이 되지만, 무역장벽으로 보호받던 비효율적인 산업의 생산은 감소하게 되어 이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동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구조조정비용은 보호장벽이 높을수록 더 클 것임.
 - 또한 산업의 효율성이 증진되면서 비숙련 단순노동의 수요가 감소하여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사이의 소득격차가 확대될 수 있음.
 - 여러 실증연구는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은 국가는 무역자유화로 인한 기술수준 향상을 비롯한 경제적 이익을 흡수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는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이익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또한 숙련노동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무역자유화로 소득배분이 개선되나,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소득배분이 악화된다고 보고하고 있음.

사. 시사점

- 경제이론적인 관점에 볼 때 FTA는 무역의 증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투자의 증가, 나아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임. 또한 NAFTA, EU,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FTA의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 구조조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약하고 보호장벽이 높은 산업에 대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개방정책을 추구하여 연착륙(soft landing)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FTA의 이익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의 수준향상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고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있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축적해야 하는데, 무역을 확대하고 인적자본 및 지식자본의 축적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쟁력을 지녔던 산업은 중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에 의해 빠르게 대체되고 있고, 내적으로는 소득의 향상으로 저임금에 의존하는 산업의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음. 이제 한국은 저임금산업과 모방형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생산적 활용이 기업과 산업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음.
 - FTA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이 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의 확대 및 안정적 확보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점점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FTA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시장접근의 제약으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는 다자주의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미국,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FTA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익집단에 대해서도 전체 국가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구조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설득 작업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함.

KIEP 발간자료 목록 (2001~2004. 6)

■ 정책연구

- | | |
|--|---|
| <p>01-01 무역개방화와 제조업부문의 변화 / 南相烈</p> <p>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鄭仁敎</p> <p>01-03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 黃祥仁·金寅培·辛仁錫</p> <p>01-04 韓·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鄭仁敎</p> <p>01-05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 金尙謙·朴仁元</p> <p>01-06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내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 曹琮和·金于珍</p> <p>01-07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 梁俊哲·金鴻律</p> <p>01-08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 尹德龍·朴淳讚</p> <p>01-09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 李鍾華·朴淳讚</p> <p>01-10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 宋有哲 外</p> <p>01-11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환경·에너지서비스를 중심으로 / 金準東 外</p> <p>01-12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의 시사점 / 崔洛均 外</p> <p>01-13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협상에의 시사점 / 尹昌仁 外</p> <p>01-14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 蔡旭·徐暢培</p> | <p>02-01 DDA 총점검-2002 / 崔洛均 外</p> <p>02-02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 宋有哲·朴芝賢·李載玉·林頌洙</p> <p>02-03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시청각·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金準東·高俊誠·具文謨·朴淳讚</p> <p>02-04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율 구조분석 / 崔洛均·鄭在皓</p> <p>02-05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 姜文盛·魯在峯·李鍾華</p> <p>02-06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 尹美京·崔允僊</p> <p>02-07 DDA 무역과 개발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 南相烈·權栗</p> <p>02-08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 崔洛均·朴淳讚</p> <p>02-09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 姜三模·王允鍾</p> <p>02-10 미국 경상수지적자 확대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姜文盛·羅秀燁</p> <p>02-11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 尹德龍·鄭在植·曹琮和</p> <p>02-12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한국의 對中 투자와 일본의 對韓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李彰洙</p> <p>02-13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 金良姬·趙炳澤</p> <p>02-14 한국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 池晚洙</p> <p>02-15 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 / 權栗·金玟慶</p> |
|--|---|

1990년~현재까지의 모든 KIEP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Homepage(<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02-16 중국 유통산업의 개방과 활용전략 / 趙顯坡
 02-17 1990년대 이후 韓·美간 무역구조의 변화 / 梁俊哲·金鴻律
 02-18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 尹德龍·鄭衡坤·南英淑
 02-19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對中東 통상확대 전략 / 金興鍾
 02-20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 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李昌在
 02-21 韓·中·日 IT 산업의 戰略的 提携 현황과 향후 전략: 知識連繫를 중심으로 / 洪裕洙
 02-22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 金鴻律
 02-2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현지화에 관한 연구 / 白權鎬 外
 02-24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 朴大槿·楊斗鏞·吳奎澤·金恩京
 02-25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국제 산업연관모델에 의한 실증연구 / 李鴻培
 02-26 북한경제백서 / 趙明哲 外
 03-01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 申寬浩·王允鍾·李鍾和
 03-02 동아시아 주요국의 적정환율과 시사점 / 姜三模·朱尙榮
 03-03 동아시아 혁신경제의 이행과 한국의 혁신전략 / 洪裕洙·李彰洙·姜丁實
 03-04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 安炯徒 外
 03-05 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전망 / 地晚洙·李 榮
 03-06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 / 洪裕洙·池晚洙·韓正和
 03-07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 / 鄭仁教·吳東胤
 03-08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 權 栗·鄭仁教·朴仁元
 03-09 일본의 통상정책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FTA 정책을 중심으로 / 李鴻培·金良姬·金恩志·程 勳
 03-10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曹琮和·李炯根

03-11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 姜文盛·金元鎬·朴淳讚·全鍾奎·權奇洙·金眞梧·羅秀燁
 03-12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 安炯徒·尹德龍
 03-13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 趙明哲 外
 03-14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 사회의 역할 / 趙明哲 外
 03-15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 현황과 남북 경제에 주는 시사점 / 趙明哲
 03-16 DDA 중간점검 - 2003 / 崔洛均 外
 03-17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 宋有哲 外
 03-18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 金準東·鄭永虎·崔秉浩·安德宣
 03-19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한국의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崔洛均·鄭在皓
 03-20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 姜文盛·朴淳讚·李彰洙
 03-21 WTO경쟁규범 협상: 문제점의 분석과 제정방향의 모색 / 尹美京
 03-22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 金準東·金鍾一·姜俊求
 03-2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鄭仁教 外
 03-24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 姜文盛·朴淳讚·宋有哲·尹美京·李 根
 03-25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 楊斗鏞 外
 03-26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 申寬浩·楊斗鏞·王允鍾·李鍾和
 03-27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 2003년 연구의 주요 결과 / 鄭仁教 外

■ 지역연구

- 03-01 아프리카 섬유산업의 현황과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모로코를 중심으로 / 金興鍾·金良姬·朴英鎬
- 03-02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 金興鍾·李哲元·朴映坤·朴慶錫
- 03-03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 李章揆·趙顯埰·吳東胤
- 03-04 메콩강유역개발: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 鄭在完·權耿德

■ 조사분석

- 01-01 싱가포르의 知識基盤經濟 이행전략과 시사점 / 鄭在完
- 01-02 아프리카 市場特性 分析 및 韓國의 輸出擴大 方案 / 朴英鎬
- 01-03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e-Trade를 중심으로 / 孫讚鉉·尹眞那
- 01-04 WTO 농업협상대미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국제기구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 宋有哲·朴芝賢
- 01-05 韓·日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 金良姬·金鍾杰
- 01-06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의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 鄭余泉
- 01-07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 權奇洙
- 01-08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 權 栗
- 01-09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 金眞梧
- 01-10 중·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李哲元
- 01-11 병행수입에 대한 WTO TRIPS논의: 공중보건과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 尹美京·李性美
- 01-12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실태와 남북협력 방안 / 趙明哲
- 01-13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 洪翼杓
- 02-01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 姜文盛·羅秀燁
- 02-02 아프리카 건설시장 특성분석 및 한국의 시장확대 방안 / 朴英鎬

- 02-03 WTO 농업협상 제2단계 각국 제안서 분석 / 宋有哲
- 02-04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한국과 일본의 사례 비교분석 / 李奎億·尹美京
- 02-05 서유럽 주요국들의 연금제도 분석 및 시사점: 덴마크·영국·스웨덴·이탈리아를 중심으로 / 朴映坤·尹錫明

■ Policy Analyses

- 01-01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2-01 Currency Union in East Asia / Han Gwang Choo and Yunjong Wang
- 02-02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ons / Inkyo Cheong
- 02-03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Capital Flows in Korea: An Empirical Investigation / Sammo Kang,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2-04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since the Financial Crisis / Chan-Hyun Sohn
- 03-01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Exchange Rate,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Market Issues / Sung Yeung Kwack, Choong Yong Ahn, and Young-Sun Lee
- 03-02 Analysis of the Trade Negotiation Options in the East Asian Context / Nakgyoon Choi, Soon Chan Park, and Changsoo Lee

■ Policy Papers

- 97-01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under Alternative Scenarios / Inkyo Cheong
- 97-02 Regional Integration and Liberalization in the Asia-Pacific / Honggue Lee and Jai-Won Ryou
- 97-03 Northeast Asia's Transboundry Pollution Problems: A Pragmatic Approach

- / Sang-Don Lee and Taek-Wan Han
- 98-01 Korea's Economic Reform Measures under the IMF Program / Chan-Hyun Sohn and Junsok Yang eds.
- 98-02 Adjustment Reforms in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December 1997 - June 1998) / Yunjong Wang and Hyoungsoo Zang

■ 정책자료/Policy References

- 01-01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 孫讚鉉 編
- 01-02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주요산업별 효과분석 / 孫讚鉉·尹眞那
- 01-03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 孫讚鉉 編
- 01-04 미국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2001년 경제동향 / 姜文盛·羅秀燁
- 01-05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과 활성화 방안 / 李晟鳳·沈相烈·王重植
- 01-06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탐구 / 李鍾華
- 03-01 WTO 투자협정 논의의 평가 및 향후과제 / 李晟鳳·金寬濤·金仁夙
- 04-01 FTA의 득과 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朴淳讚 외

■ 행사결과보고/Conference Proceedings

- 01-01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in East Asia: Issues and Prospects / Yoon Hyung Kim and Yunjong Wang eds.
- 01-02 Korea's Five Years in the OECD: Finding a New Path / Hyungdo Ahn ed.
- 02-01 Korea's Road to a Sound and Advanced Economy / Hyong-Kun Lee ed.
- 02-02 중국 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과 외국기업의 진출방안 / 朴月羅·崔義炫 編
- 02-03 남북한 및 중국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및 전망 / 趙明哲 編
- 03-01 Financial Market Opening in China and Korea /

- Young-Rok Cheong, Doo Yong Yang, and Wang Tongsan eds.
- 03-02 Financial Development and Integration in East Asia / Choong Yong Ahn, Takatoshi Ito, Masahiro Kawai, and Yung Chul Park eds.
- 03-03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Asia-Pacific Region / Heungchong Kim ed.
- 03-04 Structural Reforms and Economic Development - Experiences of the Northeast Asia / Chan-Hyun Sohn ed.
- 03-05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for a Northeast Asian FTA / Chang-Jae Lee ed.
- 03-06 China's Role in Asia and the World Economy: Fostering Stability and Growth / Yunjong Wang ed.

■ APEC Study Series

- 02-01 Culture and Trade in the APEC - Case of film industry in Canada, Mexico and Korea / Byung-il Choi
- 02-02 Diffusion Factors of Electronic Trade for Trade Facilitation in the APEC Region: A Case of Korean Small Business / Yongkyun Chung and Yongwhan Park
- 02-03 Narrowing the Digital Gap in the APEC Region / Yoo Soo Hong
- 02-04 Implementing the Bogor Goals of APEC / Hongyul Han
- 03-01 Trade Structure and Complementarity among APEC Member Economies / Sang-yirl Nam

■ Discussion Papers

- 01-01 Korea's FTA (Free Trade Agreement) Policy: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 Chan-Hyun Sohn and Jinna Yoon
- 01-02 An Appraisal of ASEM Economic Dialogues and Future Prospects / Chong Wha Lee
- 02-01 Searching for a Better Regional Surveillance Mechanism in East Asia / Yunjong Wang and Deok Ryong Yoon

- 02-02 Korea's FTA Policy: Focusing on Bilateral FTAs with Chile and Japan / **Inkyo Cheong**
- 02-03 Update on Korean Economic Reforms and Issues in Korea's Future Economic Competitiveness / **Junsok Yang**
- 02-04 Prospects for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 **Yunjong Wang**
- 02-05 An Overview of Currency Union: Theory and Practice / **Sammo Kang and Yunjong Wang**
- 02-06 Korea's Trade Policy Regime in the Development Process / **Nakgyoon Choi**
- 02-07 Reform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China: Issues and Policies / **Eui-Hyun Choi**
- 02-08 Reverse Sequencing: Monetary Integration ahead of Trade Integration in East Asi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02-09 Can East Asia Emulate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 02-10 Debt Resolution, Cross-Border M&As, Governance and Control in Korea's Post-Crisis Corporate Restructuring / **Chan-Hyun Sohn**
- 02-11 Liberalization Measures in the Process of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Trade, Investment and Capital Account Market Openings / **Chan-Hyun Sohn, Junsok Yang and Seung Beom Kim**
- 03-01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Recent Performance and Future Agenda / **June-Dong Kim**
- 03-02 The Need for Intraregional Exchange Rate Stability in Emerging East Asian Economies / **Jonghwa Cho**
- 03-03 Evolving Patterns of Corporate Financing in Korea / **Haesik Park and Yunjong Wang**
- 03-04 Trade Facilitation in the WTO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a Roadmap to Cancun* / **Chan-Hyun Sohn and Junsok Yang**
- 03-05 Moving Forward on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Surveillance System and an Improved Financial Architecture for East Asia / **Yunjong Wang and Wing Thye Woo**
- 04-01 Monetary Union and Real Convergence Compared: Europe and East Asia / **Heungchong Kim,**

Woosik Moon, and Deok Ryoung Yoon

■ Working Papers

- 01-01 Does the Gravity Model Fit Korea's Trade Patterns? Implications for Korea's FTA Policy and North-South Korean Trade / **Chan-Hyun Sohn and Jinna Yoon**
- 01-02 Impact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sia-Pacific Developing Economies / **Wook Chae and Hongyul Han**
- 01-03 Is APEC Moving Towards the Bogor Goal? / **Kyung Tae Lee and Inkyo Cheong**
- 01-04 Impact of FDI on Competition: The Korean Experience / **Mikyung Yun and Sungmi Lee**
- 01-05 Aggregate Shock, Capital Market Opening, and Optimal Bailout / **Se-Jik Kim and Ivailo Izvorski**
- 02-01 Macroeconomic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2-02 A Framework for Exchange Rate Policy in Korea / **Michael Dooley, Rudi Dornbusch, and Yung Chul Park**
- 02-03 New Evidence on High Interest Rate Policy During the Korean Crisis / **Chae-Shick Chung and Se-Jik Kim**
- 02-04 Who Gains Benefits from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 **Seong-Bong Lee**
- 02-05 Interdependent Spe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Growth Effect of Geographical Agglomeration / **Soon-chan Park**
- 02-06 Hanging Together: Exchange Rate Dynamics between Japan and Korea / **Sammo Kang, Yunjong Wang, and Deok Ryoung Yoon**
- 02-07 Korea's FDI Outflows: Choice of Locations and Effect on Trade / **Chang Soo Lee**
- 02-08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the Case of Korea with Other Asian Countries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02-09 A Dynamic Analysis of a Korea-Japan Free Trade

- Area: Simulations with the G-Cubed Asia-Pacific Model / Warwick J. McKibbin, Jong-Wha Lee, and Inkyo Cheong
- 02-10 Bailout and Conglomeration / Se-Jik Kim
- 02-11 Exchange Rate Regimes and Monetary Independence in East Asia / Chang-Jin Kim and Jong-Wha Lee
- 02-12 Has Trade Intensity in ASEAN+3 Really Increased? – Evidence from a Gravity Analysis / Heungchong Kim
- 02-13 An Examination of the Formation of Natural Trading Blocs in East Asia / Chang-Soo Lee and Soon-Chan Park
- 02-14 How FTAs Affect Income Levels of Member Countries: Converge or Diverge? / Chan-Hyun Sohn
- 02-15 Measuring Tariff Equivalents i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 Soon-Chan Park
- 02-16 Korea's FDI into China: Determinants of the Provincial Distribution / Chang-Soo Lee and Chang-Kyu Lee
- 02-17 How far has Regional Integration Deepened? – Evidence from Trade in Services / Soon-Chan Park
- 02-18 Changes in Industrial Interdependency between Japan and Korea since 1985 –An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sis– / HongBae Lee
- 03-01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in East Asi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03-02 How to Mobilize the Asian Savings within the Region: Securitization and Credit Enhancement for the Development of East Asia's Bond Market / Gyutaeg Oh, Daekeun Park, Jaeha Park, and Doo Yong Yang
- 03-03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nd Business Cycl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3-04 Dynamics of Open Economy Business Cycle Models: The Case of Korea / Hyungdo Ahn and Sunghyun H. Kim
- 03-05 The Effects of Capital Outflows from Neighboring Countries on a Home Country's Terms of Trade and Real Exchange Rate: The Case of East Asia / Sammo Kang
- 03-06 Fear of Inflation: Exchange Rate Pass-Through in East Asia / Sammo Kang and Yunjong Wang
- 03-07 Macroeconomic Adjustments and the Real Economy In Korea and Malaysia Since 1997 / Zainal-Abidin Mahani,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03-08 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Consumer Preferences on Trade in the Korean and World Motor Vehicle Industry / Sang-yirl Nam and Junsok Yang
- 03-09 The Effe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on FDI Inflows / Chang-Soo Lee
- 03-10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 Yung Chul Park, Wonho Song, and Yunjong Wang
- 03-11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03-12 The Decision to Invest Abroad: The Case of Korean Multinationals / Hongshik Lee
- 03-13 Financial Integration and Consumption Risk Sharing in East Asi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3-14 Intra-Industry Trade and Productivity Structure *Application of a Cournot-Ricardian Model* / E. Young Song and Chan-Hyun Sohn
- 03-15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Empirical Evaluation of Corporate Restructuring Programs / Choong Yong Ahn and Doo Yong Yang
- 03-16 Specialization and Geographical Concentration in East Asia: Trends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 Soon-Chan Park
- 03-17 Trade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 *A New Look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Growth* / Chan-Hyun Sohn and Hongshik Lee
- 04-01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Terrorism / S. Brock Blomberg, Gregory D. Hess, and Athanasios Orphanides
- 04-02 Regional vs. Global Risk Sharing in East

Asi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OECD 연구시리즈

- 01-01 OECD 규제개혁 연구: 규제순응과 효율성
/ 梁俊哲 · 金鴻律
- 01-02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OECD
국가들의 비교법적 고찰 / 張勝和
- 01-03 한국과 독일의 최근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 金裕燦
- 01-04 프로스포츠와 競爭法: OECD국의 사례평가 및
시사점 / 金元俊

■ 동북아연구시리즈/CNAEC Research Series

- 03-01 Korea's FDI in China: Status and Perspectives
/ Yao Shumei
- 03-02 금융개발과 금융발전: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시
사점을 중심으로 / 朱尙榮
- 03-03 국제금융센터의 발전, 결정요인 및 그 시사점
/ 李鍾郁
- 03-04 동북아 금융허브: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 安炯徒

■ 지역리포트

- 01-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
심으로 / 金恩志
- 01-02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
전요인 분석 / 朴映坤
- 01-03 유럽경제통합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 鄭厚榮
-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
정책 / 朴映坤
- 01-05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
통합의 전망 / 河由貞
- 02-01 중국 장강삼각주 권역의 투자환경 /
吳東胤 · 林泓修
- 02-02 일본 수입촉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金恩志

- 02-03 EM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 朴映坤
- 02-04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
河由貞
- 02-05 인도의 정보기술 산업 발전현황과 한 · 인도간
협력 방안 / 崔允靜
- 02-06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裴嬉娟
- 02-07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 배경과 시사점 /
權耿德
- 02-08 동아시아의 산업내무역 증가 추이와 시사점 /
朴在旭
- 03-01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 현황과 평가 -금융개
혁을 중심으로 / 李哲元
- 03-02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전
략 / 崔義炫 · 趙錫軍 · 禹辰勳
- 03-03 태국의 FTA정책과 시사점 / 權耿德
- 03-04 이라크의 전후복구 동향과 향후 전망 / 朴馥永
· 裴嬉娟
- 04-01 南亞共 淸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朴英鎬

■ 지역연구회시리즈

- 01-01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 金泳世
- 01-02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朴繁洵
- 01-03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 李忠烈
- 01-04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 姜應善
- 01-05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 鄭基虎 · 李滿基
- 01-06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 沈義燮 · 李光勳
- 01-07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에서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 尹澤東
- 01-08 EU 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 朴明浩
- 01-09 NAFTA 이후 멕시코 산업정책 변화와 진출전
략 / 鮮于鍵

01-10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 韓鍾萬·成源鏞
01-11 유럽연합(EU)의 중동유럽 확대 : 라켄 유럽이 사회까지 현황과 전망 / 李奎榮
01-12 中國의 地域經濟協力 認識과 東北亞 經濟統合可能性 / 安錫敎·許興鎬
02-01 우리나라와 미국 주식시장 동조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망 / 李忠彦
02-02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변화와 한국의 대응 / 程 勳

02-03 쿠바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金鍊鐵
02-04 Municipal Finance in Selected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Institutional Framework and Recent Development / Chang Woon Nam
03-01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와 이슬람 정책 / 吳明錫
03-02 대만기업의 對중국 투자현황과 전략 / 魏艾·范錦明·趙顯竣

朴淳讚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독일 뮌헨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연구팀장(現, E-Mail: scpark@kiep.go.kr)

著書 및 論文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공저, 2003)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공저, 2003) 외

金眞梧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한국의국어대학교 정치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現, E-Mail: jokim@kiep.go.kr)

著書 및 論文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2001)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공저, 2003) 외

金興鍾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영국 University of Oxford, MPhil in Economics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영국 University of Oxford, Honorary Member of Christ Church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現, E-mail: hckim@kiep.go.kr)

著書 및 論文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2003)

“Monetary Union and Real Convergence Compared: Europe and East Asia”(2004) 외

朴映坤

한양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現, E-mail: ygpark@kiep.go.kr)

著書 및 論文

『서유럽 주요국들의 연금제도 분석 및 시사점: 덴마크·영국·스웨덴·이탈리아를 중심으로』(2002)

『EM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과 평가』(2002) 외

金均泰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現, E-mail: ktkim@kiep.go.kr)

著書 및 論文

「프랑스, 독일의 '안정 및 성장협약' 위반과 향후 전망」(『월간 KIEP 세계경제』, 1월호, 2004)

「스페인 총선의 평가 및 대내외정책 변화」(『월간 KIEP 세계경제』, 5월호, 2004) 외

權 奇 洙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역학 석사

브라질리아연방대학교(UnB) 초청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現, E-Mail: kskwon@kiep.go.kr)

著書 및 論文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2001)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공저, 2003) 외

權 栗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 객원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장(現, E-mail: ykwon@kiep.go.kr)

著書 및 論文

『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공저, 2002)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안』(2003) 외

朴 馥 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U.C. Berkeley visiting fellow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부연구위원(現, E-mail: bypark@kiep.go.kr)

著書 및 論文

「미국의 중동정책과 이라크 경제재건 계획」(2003)

「이집트 변동환율제도 채택과 그 영향」(2003) 외

裴 嬉 娟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원(現, E-mail: hybae@kiep.go.kr)

著書 및 論文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2002)

『이라크의 전후복구 동향과 향후 전망』(2003) 외

정책자료 04-01

FTA의 득과 실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2004년 6월 25일 인쇄
2004년 6월 30일 발행

발행인 安 忠 榮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 쇄 (주)에원기획 전화: 745-8090 대표: 강대원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2076-X 94320
89-322-2068-9(세트)

정가 7,000원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 관심있는 専門家, 企業 및 一般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는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	20만	10만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2천 원		1만 원
B	(월간)KIEP세계경제	5만 원		2만 5천 원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를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발간자료, 週報(인쇄물), 전문가물 토의자료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入月로부터 다음해 入月까지 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B 월간지
개인회원 ☐			
연구자회원 ☐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특기사항

The Benefits and Costs of FTAs

Soon-Chan Park *et al.*

EU가 동유럽으로 회원국을 확대하고, 미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이 가시화되는 등,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이론은 FTA가 무역 및 투자의 촉진, 자원 배분의 효율성 향상, 경제성장의 촉진 등의 다양한 효과를 지닌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NAFTA, EU 등 FTA 사례를 보면 무역이 증가하고 투자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TA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로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생산감소 및 구조조정비용, 계층간 소득불균형의 발생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78, 1179 FAX: 3460-1144



9 788932 220765
ISBN 89-322-2076-X
89-322-2068-9(세트)